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37
----------	-------

발의연월일 : 2021. 11. 4.

발 의 자 : 김병욱 · 박성준 · 홍정민
이용빈 · 최인호 · 이병훈
유동수 · 김교홍 · 이명수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금융 편의성은 높아지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가속화되고 있음. 결제·송금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시작된 디지털 금융 혁신은 이제 대출, 보험가입, 금융상품 투자 등 전통적인 금융영역으로 확대되어, 이제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기존 금융권도 국민들의 높아진 ‘혁신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하고 있는 등 디지털 금융혁신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음.

이러한 디지털금융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중국과 경쟁 중인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금융중심지 경쟁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일본 등은 지급결제, 인증, 금융플랫폼 등에 관한

법령을 앞 다투어 정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된 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개편이 이루어진 적은 없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디지털금융의 기본법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진행 중이나, 그 개정안에 대하여 다양한 기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단순히 기관이기주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4차 산업혁명,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라는 추세 속에 “새로운 표준”을 정립해나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우리 경제가 선도형 디지털 경제로 한걸음을 내딛는 과정에서 금융안정, 이용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디지털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기도 함.

그렇기에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를 무작정 미뤄둘 수는 없음. 특히, 현행법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적인 전자금융산업 규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곤란하고, 확실적인 진입 기준을 설정하여 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도 제약하고 있는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지연되는 사이에 디지털금융 분야의 새로운 플레이어인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경쟁국에 비해 정체되고 있음. 이미 법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

한 유럽연합,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의 다수 핀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에서 약진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유니콘기업에 해당하는 핀테크기업은 1~2개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데이터 3법 개정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정비를 완결하고, 이른바 엠지(MZ) 세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삶 속에서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밝힐 스타트업·핀테크기업에게 ‘지급지시전달업-결제대행업-대금결제업-자금이체업-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 전자금융업의 겸영·부수업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금융분야에서의 전자서명인증에 대한 규율체계 등 다양한 기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디지털금융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출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급지시전달업의 도입(안 제2조제2호의6·제4호의5, 제28조제2항

제3호, 제30조제3항제2호, 제35조제1항제3호·제35조의2, 제36조의3 제2항제5호 및 제36조의7 등 신설)

지급인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지급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등에 지급지시를 전달함으로써 전자자금이체 등을 돕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하고, 지급지시전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며, 금융회사 등이 지급지시 전달업자를 통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지시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되 미리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지급지시전달업자를 차별하거나 지급지시의 처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본인신용정보 관리업(MyData)을 겸영·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등 작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 등도 쉽게 진입하여 국민들께 간편송금·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새로운 전자금융업으로서 지급지시전달업을 육성함.

나. 현행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진입규제 등의 합리화(안 제2조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 신설, 제28조, 제30조, 제36조의3제1항·제2항 등)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 전자지급수단별로 세분화된 현행 7개의 전자금융업의 종류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업무의 기능별로 구분하여 허가제인 자금이체업

과 등록제인 대금결제업·결제대행업의 3개 업종으로 간소화함과 더불어 위와 같이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하여 전자금융업을 총 4개로 재분류하며, 해외 유수의 국가들의 전자금융업의 규제 수준, 금융회사와 달리 직접 여신·수신 업무 등을 하지 않는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이나 허가·등록에 관한 특례 등을 부여하되, 이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금융업무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전자금융업자의 행위규칙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 간 융·복합이 활성화되는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핀테크 기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여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도록 함.

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안 제2조제4호의6, 제36조의3제2항제2호, 제36조의4, 제36조의5 및 제45조의2 등 신설, 부칙 제1조제3호) 은행 등 금융회사처럼 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등을 이용하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별도의 등록 없이도 대금결제업과 결제대행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고, 자금이체업자나 일정한 금융회사로서 일정한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하며,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등을 일반적인 자금이체업자 등과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금융업 외에 일정한 외국환업무,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그 밖에 경영건전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일정한 업무 등을 겸영하거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좌 기반의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금융회사처럼 금융실명거래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일반적인 자금이체업자 등과는 달리 강화된 건전성 규제를 받도록 하며, 이용자 예탁금을 이용한 여신·수신업무는 금지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합병·영업양도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보호와 금융안정의 기반 하에 하나의 금융플랫폼을 통하여 간편송금·결제 외에 계좌 기반의 다양한 전자금융업무를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형 사업자를 육성함으로써 금융혁신과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되,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은행업 등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공정한 전자금융거래 질서의 조성 등을 고려하여 이 법 공포 후 디지털금융협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시행하도록 함.

라. 간편송금서비스 및 전자화폐 등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안 제2조제2호의3·제4호의2 신설, 같은 조 제15호, 제16조,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6조의3제2항제4호 신설, 부칙 제9조제1항)

소액상거래에서 원활한 결제를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전자화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자금이체, 신용카드 등 다른 전자지급수단에

밀려 현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 및 환급 기능을 결합하여 전자적 장치에 의한 자금의 이동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형태의 간편송금서비스가 급격히 확산되는 등의 최근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전자자금이체·선불전자지급수단과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전자화폐 및 관련 업무를 폐지하는 대신에, 이용자의 자금을 보유하면서 간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자금이체업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지 않은 대금결제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 및 환급을 결합하여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간편송금서비스를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 규칙을 확립하며, 자금이체업자로 하여금 전자자금이체를 위하여 발급하는 이용자 계정은 금융회사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계좌와 연결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예금 등으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전자자금이체를 하여 줄 것을 이용자가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자금이체업자에게 환급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간편송금 시장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간편송금서비스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마.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겸영·부수업무 규율체계 도입·정비(안 제 35조, 제35조의2 신설)

이 법 제정 당시 금융산업에서 보조적 지위에 불과하였던 전자금융업자의 비중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입하는 등의 상황

에 대응하여, 다른 금융관련법령에 맞추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겸영·부수업무 규율체계를 도입·정비함으로써 이용자보호와 금융안정을 위한 위험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은행업·보험업 등 전통적인 금융업과 전자금융업과는 겸영·부수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의 전이(轉移) 가능성 등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금융업자가 겸영·부수업무를 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사후보고하도록 하고, 겸영업무의 범위를 최대한 이 법에서 규정함과 동시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으로 시장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보호와 금융안정의 기반 하에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하여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바. 대금결제업자 등에 대한 후불결제업무 허용(안 제35조제1항제2호,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36조제3항, 제49조제5항제9호의2 신설)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대금결제업자·종합지급결제사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고, 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려는 대금결제업자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며, 대금결제업자 등이 이용자별로 개인결제한도를 산정할 때 비정형·비금융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데이터 중심의 개인신용평가만으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도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후불결제업무가 대금결제업자 등의 주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후불결제의 한도액 및 해당 대금결제업자 등의 총제공한도를 제한하고, 후불결제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금전의 대부나 용자를 금지하는 등 현행 신용카드업과는 분명히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용자에게 후불결제업무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자 또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를 형사처벌하는 등으로 건전한 거래질서의 기반 하에 대금결제업자 등으로 하여금 선불결제 서비스를 보완하는 신용 기반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결제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함.

사. 이용자에탁금의 보호(안 제26조 신설)

자금이체업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대금결제업자가 이용자로 부터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금전인 이용자에탁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이용자에탁금을 별도관리하는 자금이체업자 등이 파산선고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되, 이용자가 그 자금이체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에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자금이체업자 등이나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관리기관 등이 이용자에게 직접 이용자예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디지털금융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전자식 상품권의 발행·유통 등과 같은 폰지사기 가능성 등을 차단하고, 이용자는 예치 등의 방법으로 별도관리된 이용자예탁금에 대해서도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그 자금이체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유사시에도 별도관리된 이용자예탁금이 온전히 환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이체업자나 대금결제업자가 보유하는 이용자예탁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임.

아.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이용자 보호체계의 마련(안 제2조제23호, 제27조의2제2호, 제36조의3제3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2호 등 신설)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 사이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리·중개·주선, 광고·정보제공, 비교분석·추천 등을 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전자적 시스템인 금융플랫폼의 운영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이 직접 금융플랫폼을 운영하거나 금융플랫폼 운영자와 제휴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플랫폼에서 이용자가 다른 금융회사 등의 금융상품을 금융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및 다른 금융회사 등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뿐만 아니라 금융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직접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공정한 행위규칙을 마련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디지털금융 거래질서를 확립함.

자. 이용자가 허용하지 아니한 비대면거래(Unauthorized Transaction)

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협력의무 부과

1) 현행 접근매체의 위·변조, 해킹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 등 특정한 기술적 유형으로 제한되고 있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이용자의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거나 그 거래지시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비대면거래 전반으로 그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비대면거래가 금융회사 등이 관리·운영하는 영역 외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나 오류 없이 비대면거래를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이 입증부담을 지도록 하는 등 디지털금융에서 비대면거래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함(안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신설).

2) 이용자도 전자지급수단 및 접근매체에 관하여 약관 등을 준수하고, 전자지급수단 등의 수령 시 안전하게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용자가 허용하지 아니한 비대면거래가 발생하였거나 전자지급수단 등이 분실·도난되는 등의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금융회사 등에 통지하도록 하는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등 디지털금융에서 나타나는 위험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공평하게 손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제10조의2 신설).

차.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

1) 현재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등 간의 사적인 협약 등으로 운영 중인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정한 전자지급거래청산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 이용사업자에게 개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금융회사 등이 제공사업자로서 이와 같이 개방된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일정한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도록 하며, 제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된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의 이용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전자금융업무의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효율적인 전자금융업무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36조의8 신설, 제2조제6호).

2)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의 청산대상업자가 하는 일정한 전자지급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의 차감을 통하여 전자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결제금액을 확정하며 결제기관에 그 결제를 지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제

도를 도입하고,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게 청산업무규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자료제출·검사의 방법으로 감독 등을 함으로써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여 금융시장 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의2부터 제6호까지,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22까지 신설).

- 3)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사원으로 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설립·운영 중인 금융결제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정부와 중앙은행이 함께 협력하여 지급결제제도를 안정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함(부칙 제11조).

카. 빅테크 기업이 하는 전자지급거래의 외부청산 의무화(안 제36조의 9, 제26조제8항 신설)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달리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용자예탁금을 별도관리하는 경우에도 관리기관등은 그 고객 명의로 아닌 전자금융업자 명의로 관리하게 되고, 전자지급거래를 할 때에도 전자금융업자의 명의로 처리하게 되는 등에 따라 전자금융업자

의 도산·분식회계·전산오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예방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 등의 규모가 큰 전자금융업자 등(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을 통해 전자지급거래를 처리하도록 하여 환급되어야 할 이용자별 예탁금 정보가 정확하게 확정·관리되도록 하고, 그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유사시 이용자에게 예탁금을 별도관리하는 은행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디지털금융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전자식 상품권 발행·유통 등 불법 영업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금융업자 등 빅테크 기업이 이용자에게 예탁금 반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경우에도 은행 등 관리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예탁금이 질서 있게 환급될 수 있도록 빅테크 기업의 위험으로부터 이용자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되, 지급인·수취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전자지급거래의 종류·금액에 관한 정보 등 필요·최소한의 정보만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처리하도록 하고, 그 정보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성확보를 위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이 조화롭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함.

타.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안 제4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라목, 제34조의2, 제36조의10, 제45조의2

등 신설)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역외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외에 있는 빅테크가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되면 국내 현지법인,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받도록 하고, 국내 이용자의 이용자예탁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 등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하며, 전자금융업자인 빅테크 기업이 내부적으로 처리하던 일정한 전자지급거래를 외부의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예탁금을 보호하고 빅테크 기업의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전자금융업자인 빅테크 기업이 합병·분할·해산, 전자금융업 전부의 양도 또는 양수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응하여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과. 비대면거래의 인증수단인 접근매체와 전자적 방식의 신원확인 관련 제도의 정비

- 1) 현행 접근매체를 전자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하는 등의 용도인 조회용매체와 거래지시에 쓰이거나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용도인 지시용매체로 구분함으로써 지시용매체에서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재산의 보호와 금융실명거래의 원칙 등 금융분야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되 조회용매체에서는 보

다 다양한 인증수단이 금융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매체에 대한 현행 규율체계를 합리화함(안 제2조제10호, 제10호의2, 제10호의3 신설).

2) 금융회사 등이 인증서를 지시용매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충족한 인증서를 선정하도록 하고,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에 지시용매체인 인증서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평가·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도록 하되,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시용매체로 선정된 인증서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회사 등이 업무지침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비대면거래에서 지시용매체 사용 시에는 이용자의 소유·지식·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매체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접근매체를 중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을 통하여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제도의 폐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시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안 제2조제10호부터 제10호의3까지, 제6조의2 신설, 제11조).

3) 금융회사가 비대면거래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실지명의 확인증표 사본 등의 전자적 제출, 금융회사 종사자의 영상통화 등을 통한 이용자 대조, 다른 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를 이용한 보유자 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이 중첩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금융분야 신원확인 제도의 법적인 명확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하. 금융보안의 원칙과 안전성 확보 의무의 명확화

- 1) 금융보안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정보, 정보처리시스템, 정보통신망 등인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활동으로서 정의하며, 접근권한이 없는 자의 정보자산 접근 금지(기밀성, Confidentiality), 정보자산의 훼손·멸실·무단사용 등 방지를 통한 정보자산의 완전성·정확성의 유지(무결성, Integrity), 전자금융업무에 필요 시 정보자산에 접근하여 사용가능할 것(가용성, Availability), 침해사고·재난 등의 위험 발생 시 정보자산의 회복성 유지(업무지속성, Business Continuity), 금융회사 등의 조직·임직원의 금융보안 관련 역할 명확화 등 유럽연합·호주 등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보안의 원칙을 제시함. (안 제2조제20호의2부터 제22호까지 및 제20조의2 신설)

2)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와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조직·예산 및 건물·설비 등 시설, 정보처리시스템 등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의 지속성에 관한 사항, 재난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훈련, 금융보안 관련 교육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21조).

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의 금융보안 거버넌스 강화(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제39조의2 등 신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의 이사회는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보안책임자를 사내이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 지정하도록 하며, 금융보안책임자가 금융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보안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금융보안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며, 금융보안책임자의 주관하에 금융보안협의체를 운영하고 금융보안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등이 일상적 업무부터 고도의 의사결정까지 전사적(全社的) 관점에서 금융보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너. 전자금융업자 등의 업무위탁 등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

1) 이 법 제정 당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등의 지위에 불과하였던 전자금융보조업자가 현재는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 금융플랫폼

운영자 등과 같이 금융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현재의 전자금융보조업자 개념을 폐지하는 대신에 수탁자등으로 규율하고 일정한 금융보안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 관련 사업자들이 금융안정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 제11조, 제21조제1항, 제40조 및 제27조의2 신설).

-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무나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업무를 제3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 등 금융보안을 고려한 업무위탁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위탁업무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탁자등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조치명령권 행사, 금융감독원장의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아웃소싱 등이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는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7항, 제36조의10, 제40조의2 신설).

더.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

- 1) 현재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의 비대면거래로만 한정되어 있는 전자금융거래의 개념에 대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로 개념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디지털금융에서 이용자 보호

와 금융보안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제1호의2 신설).

2)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대금결제업 규제에서 제외하되, 현재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한 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간주하여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업무를 수탁받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등을 이 법에 따른 수탁자로 의제하여 금융보안 등의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정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제1호 신설, 부칙 제5조).

3) 정부로 하여금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촉진,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육성, 전자금융거래의 기반조성 등에 관한 전자금융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분야의 디지털전환에 대응하여 전자금융발전계획, 데이터활용과 정보보호,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술의 표준화, 지능정보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등 이해관계 조정 등을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4) 전자금융업자가 합병, 분할, 전자금융업 전부의 양도 등을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신고받은 내용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제한하거나 시정명령할 수 있으며, 그 신고로 인해 전자금융업이 폐지되는 경우 이를 등록의 말소로 간주하여 사업자가 불필요한 등록 말소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도록 함(안 제45조).

5)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자금융업을 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시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금융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무허가·미등록 사업자의 전자식 상품권의 발행·유통 등 불법 영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업 관리감독 하에서 사업자에게 이용자에탁금의 별도관리, 외부청산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안 제49조제4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여”를 “하고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을 위한 기반을 조성 하여”로,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를 “전자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금융혁신과”로, “피하고”를 “도 모하고 금융안정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를 ““전자금융거래”란”으로,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을 “제공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자금융업무”란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업무 및 이에 수반되거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내부의 업무를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를 ““전자지급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의 거래지시에 따른 행위로서”로,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을 “전자금융업자에게 자금을 맡기거나 이들로부터 자금을 인출하거나”로,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자금”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

나.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

다. 지급인을 대리하거나 대행하는 자

제2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 및 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전자금융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자금이체업

나. 대금결제업

다. 결제대행업

라. 지급지시전달업

2의3. “자금이체업”이란 전자자금이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의4. “대금결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가목 또는 나목을 포함한 하나 이상의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그 발행의 대가로 수취한 자금의 관리를 포함한다)

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정산

2의5. “결제대행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3자가 발행한 전자지급수단의 이용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정산 및 가맹점에 지급하는 대금의 관리 업무

나. 이용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까지 결제대
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업무

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의6. “지급지시전달업”이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지급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게 지급인의 지급지시
를 전달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자금이체업자”란 전자금융업자 중 자금이체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의3. “대금결제업자”란 전자금융업자 중 대금결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의4. “결제대행업자”란 전자금융업자 중 결제대행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의5. “지급지시전달업자”란 전자금융업자 중 지급지시전달업을 하
는 자를 말한다.

4의6. “종합지급결제사업자”란 제36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을 ““겸영전자금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자금융업을 겸영(兼營)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제2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이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지급거래(이하 “청산대상거래”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를 차감하고 이에 따른 결제금액을 확정하여 다음 각 목의 자(이하 “결제기관”이라 한다)에게 그 결제를 지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결제기

관에 하는 결제의 지시를 대신하여 스스로 보유한 금전,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으로 결제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전자지급거래청산업으로 본다.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나. 은행

다. 가목 및 나목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의3.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란 제38조의3에 따라 전자지급거래 청산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조제6호 중 ““결제중계시스템”이라 함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이란 전자지급수단, 업무규정, 정보자산 등을 비롯하여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운영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이용자”라 함은”을 ““이용자”란”으로, “자를”을 “자(지급인 및 수취인을 비롯하여 그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을 “전화기, 스마트·모바일 기기 등의”로 한다.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을 ““접근매체”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

업자가 이용자에게 발급하거나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한 조회용매체나 지시용매체로서”로, “수단 또는 정보를”을 “것을”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이하 “비대면거래”라 한다)에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

제2조제10호나목 중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전자서명생성정보(이하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한다)”로, “인증서”를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거나 직접 거래지시를 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이에 준하는 정보”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거래지시를 위하여 일회성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전자적 장치
및 이에 준하는 수단 또는 정보

바.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 또는 정보

제2조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조회용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내용을 조회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이용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

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10의3. “지시용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2조제11호 중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의 지급지시를 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 또는 이에 관한 업무절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자자금이체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다. 직불전자지급수단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마. 전자채권

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조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개설된 계좌나

자금이채업자에 개설된 계정(금융회사 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개설된 계좌에 연결된 계정으로 한정한다)로, “계좌로”를 “계좌나 계정으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을 “금융회사 또는 자금이채업자에 대한 지급인이나 수취인의 지급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가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로,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을 “금융회사 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개설된 계좌나 자금이채업자에 개설된 계정에서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을 “재화·용역의 대가를 지급”으로 한다.

제2조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저장되어”를 “저장(이하 “충전”이라 한다)되어”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를 “발행인 외의 제3자(발행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삭제한다.

나. 발행인은 재화·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기 전에 이용자로부터 충전의 대가를 지급받을 것. 이 경우 발행

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용실적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적립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경제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실적 등을 충전의 대가의 지급으로 본다.

다. 가목에 따른 사용으로 해당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제3자가 그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 것

라. 다목에 따른 권리가 해당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에 표시될 것

제2조제16호다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생성된 전자서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지급지시”란 전자지급거래의 처리를 요청하는 거래지시를 말한다.

제2조제18호 중 “전자금융거래가”를 “비대면거래가”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금융보안”이란 다음 각 목의 위험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자적 침해행위

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정보처리시스템·정보통신망의 장애, 부적절한 업무절차, 임직원의 과오(過誤) 등으로 인하여 회사 또는 법인의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험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

20의3. “정보자산”이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그 자로부터 정보처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정보자산보유자”라 한다)에서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정보, 정보처리시스템, 정보통신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보자산보유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고유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외에 다른 업(業)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유업무나 금융업무와 관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0의4.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정보를 처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를 말하며, “신용정보”는 “정보”로

본다)하거나 그 정보를 송신·수신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것(「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의5.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2조제21호 중 “”전자금융기반시설“이란”을 “”전자금융기반시설“이란 정보자산으로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 중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를 “악성코드 감염, 서비스거부”로, “공격하는”을 “공격하거나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을 방해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금융플랫폼”이란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로 이루어진 둘 이상의 집단 사이에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스마트·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리, 중개나 주선을 하는 행위

나.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이용자에게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나 정보제공 등을 하는 행위

다. 이용자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교분석, 추천 등을
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전자금융거래 등의 적용배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1. 금융상품의 제공 과정에 수반되지 않거나 밀접한 관련이 없는 정
보의 처리
2.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리, 수수료, 환율 등 금융상품 및 서
비스의 내용에 대하여 광고 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그 사실을 알리
거나 안내하는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
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
4. 「어음법」에 따른 어음 또는 「수표법」에 따른 수표를 이용하
는 거래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 거래

5. 그 밖에 해당 전자금융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금융거래에서 제외하더라도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2. 그 밖에 해당 전자지급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지급거래에서 제외하더라도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대금결제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2.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대금결제업
3. 그 밖에 해당 전자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금융업에서 제외하더라도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조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5장”을 “제21조의2제2항·제3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제21조의6제1항, 제22조의4 및 제5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 중”을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중에서”로, “금융회사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를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1조의3”을 “제21조의5”로 한다.

2. 제21조의3의 금융보안책임자 지정

3. 제21조의4에 따른 금융보안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자금융거래 및 금융보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하는 행

위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제27조의2제2호
· 제3호 및 제36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23호가목의 금융플랫폼 : 해당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관여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
2. 제2조제2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플랫폼 : 해당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

제4조의 제목 “(상호주의)”를 “(역외적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을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여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전자금융발전계획의 수립) 정부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거래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이하 “전자금융발전계획”이라 한

다)을 세울 수 있다.

1.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2. 혁신적인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3.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금융보안에 관한 사항

제4조의3(디지털금융협의회) ① 4차 산업혁명, 데이터경제 등 금융분야의 디지털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금융 분야의 안정과 혁신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디지털금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자금융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금융의 활성화 및 금융분야에서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및 금융보안 등에 관한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금융분야에서의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그 밖의 금융분야의 혁신사업자 간 공정한 전자금융거래 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디지털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접근매체 사용의 원칙 등)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나 이용자는 발급·등록된 접근매체에 대하여 해당 이용자 및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외의 제3자에 의하여 그 접근매체가 사용·관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접근매체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에 관한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자금융거래에서 다양한 접근매체가 개발·이용되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발급할”을 “발급하거나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접근매체를 등록할”로, “발급하여야”를 “발급·등록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발급”을 “발급·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를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본인임을”을 “그 이용자인지 여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2항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으로, “본인확인을”을 “이용자 여부의 확인을”로, “본인확인 방법”을 “이용자확인 방법”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제6조의4 및 제6조의5로 하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인증서 요건 등)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지시용매체로서 인증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시용매체로서 인증서에 관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인증서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 한다)는 지시용매체로서 인증서에 관한 업무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10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를 받고, 「전자서명법」 제9조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지시용매체로서 선정된 인증서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금융위원회와의 공동 조사를 포함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3(전자금융거래에서 실명확인 방법 등에 관한 특례) ① 금융회사는 비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지명의(이하 이 조에서 “실지명의”라 한다)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비대면거래에서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라 정하는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서류로서 주민등록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표·서류의 사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식에 따라 제출하는 방법
2. 금융회사의 종사자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증표·서류의 사본 상의 사진을 확인함으로써 영상통화 등으로 이용자와 대조하는 방법
3. 해당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개설된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전자자금이체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자가 그 계좌를 정당하게 소유하는 자인지를 확인하는 방

법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통하여 이용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5. 그 밖에 비대면거래에서 이용자를 확인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전자금융거래”를 각각 “비대면거래”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이용자의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거나 그 거래지시·동의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비대면거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사고 발생에 있어서”를 “제1항의 비대면거래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제2항제1호”로, “대통령령이”를 “제6조제3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부담하는 이용자의 의무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1의2. 이용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대면거래를 한 경우

1의3. 이용자가 제1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비대면거래를 처리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그 통지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해당 통지의무가 이행되기 전에 제1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이용자의 입증부담 경감) ① 이용자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1. 해당 비대면거래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영역 외에서 발생한 사실
2. 이용자의 거래지시나 동의에 따라 오류 없이 비대면거래를 처리한 사실
3. 이용자가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통지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증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면의 사유를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10조의 제목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을 “(접근매체 등의 분실과 도난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접근매체의”를 “접근매체 또는 전자지급수단의”로, “접근매체를”을 “접근매체나 전자

지급수단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비대면거래 등에 관한 이용자의 협력의무) ① 이용자는 전자지급수단 및 접근매체에 관하여 이 법 및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부터 전자지급수단 또는 접근매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전자지급수단이나 접근매체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비대면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거래지시나 동의 없이 처리된 비대면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2. 거래지시나 동의에 따라 비대면거래가 처리되지 아니한 사실
3. 접근매체 또는 전자지급수단의 분실·도난 등의 사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접근매체 사용에 관한 절차 등)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발급·등록 및 사용·관리 등의 절차에 관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 및 비대면거래의

유형별 위험의 정도를 반영하여 비대면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업무지침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높은 비대면거래에서 이용자에게 지시용매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접근매체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접근매체를 중첩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접근매체, 그 밖에 이용자만이 소유·지배하는 수단 또는 정보
2. 제2조제10호라목의 접근매체, 그 밖에 이용자의 신체적·행동적 특징을 컴퓨터 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생성한 정보
3. 제2조제10호마목의 접근매체, 그 밖에 이용자만이 알고 있는 정보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비대면거래에서 거래지시의 목적 또는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의 확인 목적으로는 이용자에게 조회용매체를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대면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지시용매체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2. 제3항 단서에 따른 약정에 따라 조회용매체를 사용하도록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대면거래를 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를 “금융회사 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개설된 수취인의 계좌나 자금이체업자에 개설된 수취인의 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를 “(수취인의 지급지시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동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추심이체”를 “수취인의 지급지시에 따른 전자자금이체”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전자자금이체의 특성에 따라 출금에 대한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

래지시”를 “지급지시”로 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의 유무
2. 제1호에 따른 제공을 하는 자와 수취인이 동일인인지 여부
3. 해당 출금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제16조의 제목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을 “(자금이체업자의 환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화폐발행자”라 한다)는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 또는 예금계좌를”을 “자금이체업자(겸영전자금융업자로서 자금이체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전자자금이체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개설된 해당 이용자의 계좌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자화폐의”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가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업무를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교환의 방법 및”을 “제2항에 따른 인출 및 전자자금이체의 방법과”로, “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② 자금이체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예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등으로 인출하거나 전자자금이체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을 “(전자자금이체에 의한 채무 변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자화폐보유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이용자가 자금”으로, “전자화폐로”를 “전자자금이체를 통하여 금융회사 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개설된 수취인의 계좌로”로, “대금의”를 “자금의”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전자화폐 등의 양도성)”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 또는 전자화폐”를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본문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을 각각 “선불전자지급수단을”로 하고, 제2항 본문 중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실지명의를”를 “이용자의 신원이”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생성된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금융 보안 및 이용자 보호”로 한다.

제3장제1절(제2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금융보안

제20조의2(금융보안의 원칙)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정보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접근권한이 없는 자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정보자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2. 정보자산을 훼손·멸실하거나 무단으로 사용·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 정보자산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전자금융업무에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정보자산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2조제20호의2 각 목의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전자금융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출 것

2. 위험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자산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지배구조와 내부 조직을 구성·운영할 때 이사회부터 임직원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금융보안에 관한 책무를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이사회(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금융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그 업무를 집행할 최종적인 책무가 있다.

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조직을 구성·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보안에 관한 전사적(全社的)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부 조직은 정보기술부문으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1. 회사 또는 법인의 규모

2.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3. 제2조제20호의2 각 목의 위험이 전자금융기반시설, 그 밖의 정보자산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

⑥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거나 그 거래지시·동의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사고(이하 “전자금융사고”라 한다),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정보자산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등에 미리 대비하고, 해당 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내부 조직 간이나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상호 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⑦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무나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업무를 제3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보안을 고려한 업무위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을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하며, 이 절 및 제38조의23, 제39조의2에서 같다)는 전자금융거래와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36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른 수탁자(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자
2.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와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1조제2항 중 “전자금융거래”를 “전자금융거래와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으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력, 조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건물, 설비 등 시설에 관한 사항
3. 전자금융업무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4. 정보처리시스템,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에 관한 사항
5. 전자금융업무의 지속성에 관한 사항
6. 재난 등에 대비한 비상대책, 비상대응훈련 등에 관한 사항
7. 전자금융거래의 위험 정도를 고려한 절차 및 통제에 관한 사항
8. 금융보안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9.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주요수탁자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보안을 고려한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와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제21조제3항 중 “제2항의”를 “제2항에 따른”으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 및 법인의 규모, 처리하는 전자금융업무, 업무위탁의 중요성 등의

특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제21조의6 및 제26조를 각각 제21조의3, 제21조의5, 제22조의3, 제21조의6, 제21조의7 및 제22조의2로 하고,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이사회 등의 책무 등) ① 금융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등의 이사회(금융회사등이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3제5항에서 같다)가 결정한다.

1. 전사적(全社的)인 금융보안 체계에 관한 사항
2. 전자금융업무의 지속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전자금융사고와 침해사고 등에 따른 피해 및 그 확산의 방지에 관한 기본사항
4.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금융회사등이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하는 기관의 구성·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하여 정관을 변경하기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관의 구성·운영 및 권한 등이 전자금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변경, 그 권한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중전의 제21조의2)의 제목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을 “(금융보안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보안책임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를 “금융회사등은 금융보안책임자를 사내이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금융회사등의 금융보안책임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금융보안책임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략 및 계획”을 “전략”으로 하고, 같은 항 제2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을 “금융보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자금융거래의 사고”를 “전자금융사고 및 침해사고 등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을 “전자금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한다.

2. 제21조의4에 따른 금융보안계획의 수립 및 시행

4의2.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정을 지원하는 업무

제21조의3(중전의 제21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금융보안책임자는 전자금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안 업무의 집행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금융보안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안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금융회사등은 전사적인 관점에서 전자금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보안책임자가 주관하는 내부 조직의 협의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하는 금융보안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의 업무
 2. 이용자 보호에 관한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의 업무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 나. 준법감시인의 업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⑧ 금융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제5항에 따른 보고의 시기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점검과 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금융보안계획의 수립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전사적인 관점에서 전자금융거래 및 정
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보안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1.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예산, 추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3.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금융보안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5(중전의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을 각각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21조의6(중전의 제21조의5)제1항 중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전자금융기반시설, 그 밖의 정보자산”으로, “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를 “침해사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21조의8 및 제21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8(침해사고 등의 정보 공유 등) ①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자금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8조의23에 따라 지정된 보안지원전담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안지원전담기관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금융회사등 사이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침해행위 및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
2.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전자금융업무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비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를 탐지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수집되거나 탐지된 정보로서 비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 그 밖에 비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를 분석·가공한 정보. 이 경우 보안지원전담기관등이 분석·가공한 정보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해서는 제22조의2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③ 제1항에 따른 제공·이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9(이용자 유의사항의 안내 등) ① 금융회사등은 이용자에게 접근매체의 관리, 전자금융사고·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또는 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2(중전의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할 때”로, “얻지”를 “받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은행법」 제21조의2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제22조의3(중전의 제21조의4)제1호 중 “전자금융기반시설”을 “전자금융기반시설, 그 밖의 정보자산”으로, “행위”를 “행위.”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금융사고·침해사고의 발생,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오류 또는 장애 등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2조의3(중전의 제21조의4)제2호 중 “전자금융기반시설에”를 “전자금융기반시설, 그 밖의 정보자산에”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을 “그 관리·운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을 “악성코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전자금융기반시설, 그 밖의 정보자산의 안정적 관리·운영”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에”를 “전자금융기반시설, 그 밖의 정보자산에”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금융분야의 재난관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의 안정과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기본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 행동매뉴얼을 수립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중대사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정보처리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 등의 장애로 전자금융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경우

2.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 행동매뉴얼의 세부사항,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 앞에 절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 보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용한도”를 “1회 또는 1일 이용한도”로 한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한도. 이 경우 제2조제14호나목 후단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는 그 경제상의 이익을 해당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충전잔액(충전한 금전적 가치에 대하여 이를 지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를 지급에 사용하고 증표 등에 남은 금전적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최고한도

나. 1일 이용한도

2.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1회 또는 1일 이용한도

나. 자금이체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자금의 잔액한도(1개의 계정에서 전자지급거래에 사용되고 남은 금액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을 “전자금융업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을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으로, “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를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를 “보고 및 신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금융회사의 비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제24조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이용자예탁금의 보호) ① 자금이체업자 또는 대금결제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용자예탁금(이용자로부터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구분에

다른 금액 이상의 이용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예치(預置), 신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자금이체업자: 이용자예탁금 전액

2. 대금결제업자: 이용자예탁금 중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자금이체업자 또는 대금결제업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예탁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예탁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자금이체업자 또는 대금결제업자는 이용자예탁금에 관한 행위로써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기관에 대하여 별도관리에 관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관리기관에 대하여 별도관리에 관한 계약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3. 관리기관으로부터 이용자예탁금을 인출하는 행위(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한 이용자에
탁금에 관한 자금이체업자 또는 대금결제업자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상계(相計)·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⑤ 이용자에탁금을 별도관리한 자금이체업자 또는 대금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한
이용자에탁금이나 이에 관한 청구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⑥ 이용자에탁금을 별도관리한 자금이체업자 또는 대금결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별도관리한 이용자에탁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지급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이내에 그 사실과 이용자에탁금의 지급시기·지급장소, 그 밖에
이용자에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말소
2. 회사 또는 법인의 해산의 결의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43조제2항의 전자금융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같은 항에 따라 자금이체업자 또는 대금결제업자로부터 이용자에게 지급금을 직접 지급받기에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용자에게 지급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등이 이용자에게 이용자에게 지급금을 지급하면 자금이체업자 또는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관리기관등의 지급채무 및 이용자에 대한 자금이체업자 또는 대금결제업자의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⑧ 이용자에게 지급금을 별도관리한 자금이체업자나 대금결제업자 또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그 자금이체업자나 대금결제업자에 대하여 제36조의9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관리기관등이 제7항에 따른 이용자의 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의8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제7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용자에게 지급금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⑨ 이용자예탁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등”이라 한다)는 자금이체업자 또는 대금결제업자가 이용자예탁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⑩ 관리기관이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자예탁금을 별도관리한 자금이체업자 또는 대금결제업자에게 별도관리된 이용자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⑪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증권의 매수
2.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3.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
4. 그 밖에 이용자예탁금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⑫ 제1항에 따라 자금이체업자 또는 대금결제업자가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를 하여야 하는 이용자예탁금의 범위, 제1항에 따른 별도관리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자금이체업자·대금결제업자가 보유하는 이용자예탁금의 운용방법, 제7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행사방법, 제9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은 겸영전자금융업자로서 자금이체업이나 대금결제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를 하는 대금결제업으로 한정한다)을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관리의 방법 및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금융회사별로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해당 금융회사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경영건전성 감독의 내용
2. 환(煥)업무, 자금운용업무 등 해당 금융회사가 고유업무로 하는 금융업의 특성

제27조제2항 중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금융플랫폼 이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를 준용한다.

1.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
2. 그 밖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8조제1항 본문 중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을 “자금이체업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은행
법」에 따른 은행”을 “다만, 은행,”으로, “금융회사는”을 “금융회사로
서 계좌에 의한 전자자금이체를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
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대해서 은행,”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
령으로”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
음과 같이 한다.

1. 대금결제업
2. 결제대행업
3. 지급지시전달업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
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을 “대금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제2조제14
호나목 후단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
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
증보험 등에 가입한”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
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분기별 가맹점에 대한 대가의 정산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나.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지급지시전달업은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지급거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8조제4항 본문 중 “제3항제1호 다목”을 “제3항제1호”로, “(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을 “(제20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로, “제39조제1항·제6항”을 “제39조제1항, 제40조의3”으로, “제46조, 제46조의2”를 “제43조의3제1항, 제46조, 제46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2항에 따른 등록”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따라 허가를”을 “따라 자금이체업 허가를”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을 “자본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자자금이체를 위해 이용자로부터 받은 자금과 분기별 전자자금이체된 금액이 각각 30억원 이하인 경우 :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자금이체를 위해 이용자로부터 받은 자금과 분기별 전자자금

이체된 금액이 각각 100억원 이하인 경우 :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8조제2항제1호”로, “따라”를 “따라 대금결제업을”로, “다음”을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다음”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발행잔액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의 분기별 가맹점에 대한 대가의 정산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 2억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발행잔액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의 분기별 가맹점에 대한 대가의 정산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 5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을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결제대

행업·지급지시전달업과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을 할”로,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 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 외의 자: 5억원 이상으로”를 “지급지시전달업 : 1억 5천만원 이상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결제대행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분기별 가맹점에 대한 대가의 정산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 2억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전자채권관리기관 :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30조제4항 중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한 후 2분기 이상 계속하여 제3항제1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거나 대금결제업 또는 결제대행업 등록을 한 자가 그 허가 또는 등록 후 2분기 이상 계속하여 자본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으로, “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본금요건”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금이체업 자본금 기준이 30억원을 초과하고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금이체업 자본금 기준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대금결제업 자본금 기준이 30억원을 초과하고 100억원 이하인 경우 : 5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대금결제업 자본금 기준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5. 결제대행업의 분기별 가맹점에 대한 대가의 정산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31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출자자 또는 외국 전자금융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의 세부요건”을 “등록요건”으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를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른 회사

-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경우: 주식회사
- 2) 제28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금결제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도록 규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결제대행업 또는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외국 전자금융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전자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전자금융업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외국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특례) ① 외국 전자금융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기금은 이를 자본금으로 보고, 자본금·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은 이를 자기자본으로 보며, 국내대표자는 사내이사로 본다.

② 국내지점등은 제1항의 영업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두어야 한다.

③ 국내지점등은 제26조에 따라 이용자예탁금에 대한 별도관리를 할 때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이용자의 이용자예탁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영업하는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내지점등이 청산·파산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에 두는 자산이나 자금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지점등의 대표자의 직무를 일시 대행할 자(이하 이 항에서 “직무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국내지점등은 그 사실을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무대행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그 국내지점등에 명령할 수 있다.

1. 국내지점등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내지점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요구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제1호의 요구에 따라 그 국내지점등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대표자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할 것을 요청할 것
3. 제2호의 요청을 받은 국내지점등이 제2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표자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할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에 관한 사항 등 국내지점등의 전자금융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점업제한)”을 “(점영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를 “전자금융업자(점영업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업무가 아닌

업무는 이를 겸영하지 못한다”를 “업무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 (그 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후불결제업무”라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업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업무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
7.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1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12.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때에는 그 업무를 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겸영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한다.
 - ③ 대금결제업자(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1. 이용자 본인이 신청할 것
 2. 제1호에 따른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일 것
 3.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후불결제업무에 따른 한도액이 대금결제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개인결제한도를 넘지 않을 것
 4. 그 밖에 후불결제업무의 제공에 필요한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④ 대금결제업자는 제3항제3호에 따라 이용자별로 개인결제한도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체계를 갖출 것
 2. 이용자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활용할 것
- ⑤ 대금결제업자는 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3호에 따른 한도액과 후불결제업무 총제공한도를 지켜야 한다. 이 경우 후불결제업무 총제공한도의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⑥ 대금결제업자는 후불결제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자에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후불결제업무의 재

원(財源)으로 하는 행위

2. 스스로 신용을 공여한 것에 대한 이자(그 명칭이 무엇이든 신용 공여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경제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를 포함 하되, 지연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이용자로부터 받는 행위

3. 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는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용자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후불결제업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여신 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겸영업무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

로 하여야 한다.

⑩ 금융위원회는 제8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겸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부수업무) ① 전자금융업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부수하는 업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제2조제15호의 전자화폐”를 “전자자금이체”로, “전자화폐라는”을 “전자자금이체 또는 이와 유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를 “자금이체업의 허가 또는 그 면제”로, “전자화폐라는”을 “전자자금이체 또는 이와 유사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후불결제업무가 아닌 것에는 후불결제업무, 소액후불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전자금융업에 관한 광고·권유 등) ① 전자금융업자(겸영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가 아닌 자는 자기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광고나 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면제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금융업자가 하는 전자금융업
2. 전자금융업자가 처리하는 전자지급거래

3.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발행하거나 그 업무로 제공하는 전자
지급수단

② 제1항은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와
금융플랫폼을 통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광고나 권유를
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나 권유
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광고·권유
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광
고나 권유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광고·권유의 내용, 금지되는
행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6조의3(전자금융업자 등의 행위규칙)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
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전자금융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위
원회는 해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별, 학력, 장애 및 사회적 신분 등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
2.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금융상
품 및 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행위
3.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불확실한
내용 제시를 통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4. 이용자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지 않는 행위
 5.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행위
 6.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가 전자금융업무(이용자의 권리 또는 이익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로 한정한다)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처리시스템으로만 전자금융업무를 처리할 때 해당 전자금융업무의 합리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체계를 갖추지 않는 행위
 7. 제6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의 처리의 결과 및 주요기준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행위
 8.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전자금융업자(겸영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다)는 전자금융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이체업자가 이용자에게 개설하여 준 계정을 이용자로 하여금 계좌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자금이체업자 또는 대금결제업자가 자금이체업무나 대금결제업무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이용자에탁금에 대한 이자(이자와 유사하게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되, 제2조제14호나목 후단에 따른 경제상의 이익은 제외한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나. 이용자에탁금을 재원으로 금전의 대부,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3. 대금결제업자 또는 결제대행업자(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하는 행위로서 제37조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행위

4. 대금결제업자(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하는 행위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 및 환급 기능을 결합하여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업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지급지시전달업자가 하는 행위로서 이용자의 지급지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자금을 보유하는 행위

6.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직접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플랫폼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2. 제2조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에 따라 해당 금융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업무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가.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나.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내용,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3.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할 의사가 없는 용역을 제공받도록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금융플랫폼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활

동에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제휴하는 경우에도 그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는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의 종사자로 본다)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의10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6조의4(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금이체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영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금이체업자가 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하려는 업무에 대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② 자금이체업자 또는 자금이체업자가 되려는 자로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5(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의3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4조의3까지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준용한다.

1.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방법과 달리 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방법

2. 제1호에 따라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다른 금융회사 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개설된 계좌를 포함한다)로 하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②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다.

③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전자자금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직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는 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라 자금이체업과 대금결제업을 할 수 있다.

④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다른 청산대상업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목적으로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에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예탁금으로서 별도관리되는 금액으로 본다.

⑤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전자금융업 외의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2.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그 밖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경영건전성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금융위원회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자금이체업자, 대금결제업자 및 결제대행업자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6(전자지급거래의 처리에 관한 원칙) ①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전자지급거래의 공정한 경쟁환경

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업무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금융안정과 금융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다른 전자금융업자(은행이나 겸영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다른 전자금융업자를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전자지급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수준에 상응하게 그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할 것

제36조의7(지급지시전달업의 법률관계) ① 금융회사 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지급지시전달업자(겸영전자금융업자로서 지급지시전달업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이용자의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지급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지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전자자금이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자금이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를 받아 전자자금이체를 처리한 이용자의 계좌에서 해당 지급지시전달업자를 통하여 전자자금이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③ 금융회사 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자금이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시 전달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직접 지급지시 전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지급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급지시 전달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지급지시를 받을 수 있다.

④ 금융회사 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지급지시를 처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지급지시 전달업자를 차별하거나 그 지급지시의 처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금융회사 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지급지시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방식을 운영하는 비용 등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지시 전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지급지시 전달업자에 불리하게 부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8(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의 개방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

금융거래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효율적인 전자금융업무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사업자”라 한다)에게 개방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지정을 할 때에는 미리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 또는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업무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및 제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이용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전자금융업무의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이용사업자와 제공사업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2. 이용사업자와 제공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금융보안에 관한 사항

3. 이용사업자, 제공사업자 및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간 전자금융업무의 제공에 관한 기술의 표준화

4.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효율적인 전자금융업무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9(전자지급거래의 청산의무) ① 전자지급거래의 빈도, 회사 또는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지급거래(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상대방이 같은 전자금융업자인 전자지급거래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하여금 제38조의9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의8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급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수취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해당 전자지급거래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제38조의9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36조의10(전자금융업자 등의 업무위탁) ① 전자금융업자(겸영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에서 같다)는 전자금융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업무위탁을 받는 제3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의 위탁을 제한하

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전자금융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외국 전자금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전자금융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전자금융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⑥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정보 보호 및 위험관리·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⑦ 「민법」 제756조는 수탁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

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⑧ 이용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에게 하는 각종 통지를 수탁자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에게 한 통지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⑩ 업무위탁·재위탁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이하 “전자결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각각 “전자결제”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전자결제”로 한다.

6.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8조제2항제1호 중 “전자화폐등”을 “전자지급수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을 “위조·변조 또는 위작·변작된 전자지급수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1. 가맹점수수료의 세부내용 및 산정기준

제38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전자금융거래관계기관

제4장의2제1절(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22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제38조의2(무허가 전자지급거래청산업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직접 또는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로서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할 것
2. 청산대상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산대상업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감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
3. 청산대상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의 차감을 통하여 전자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② 제38조의8, 제38조의10부터 제38조의15까지, 제38조의22(제1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자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8조의3(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허가) ①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려

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전자지급거래청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지급거래청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

2. 2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기본재산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가. 전자지급거래청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호가목의 자인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전자지급거래청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호나목의 자인

경우: 결의권이 있는 사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4(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내용
2. 허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허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허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5(예비허가) ① 제38조의3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업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38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허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

거래청산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38조의 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허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예비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허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예비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6(허가요건의 유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제38조의3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업허가를 받아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허가요건(제8호는 제외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아닌 자는 “전자지급거래청산”, “지급거래청산”, “지급청산”, “청산거래”, “지급결제청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8(임원 등) ①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상근임원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게 제38조의9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청산대상업자의 임직원 외의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상근 임직원은 청산대상업자 및 전자금융거래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9(업무) ①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청산대상거래의 확인 업무
2. 청산대상거래와 관련한 지급지시를 청산대상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3. 청산대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차감 업무
4. 결제할 금액을 확정하고 결제기관에게 결제를 지시하는 업무. 이 경우 결제의 지시를 대신하여 스스로 보유한 금전등으로 결제를 처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5.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채무부담업무
6.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업무

②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수행을 위탁 또는 지정받은 업무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업무로 규정

한 업무

3. 그 밖에 해당 업무를 하더라도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8조의10(청산업무규정 등) ①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청산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정관 및 제1항의 청산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청산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제38조의9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청산대상거래에 관한 사항
2. 청산대상업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3. 전자지급거래청산업으로서 행하는 채무의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부담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4. 청산대상업자의 채무의 이행 확보에 관한 사항
5.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에 관한 사항
6. 청산대상업자가 아닌 자가 청산대상업자를 통하여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하여금 청산대상거래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그 전자지급거래청산의 중개·주선이나 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전자지급거래청산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자지급거래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8조의11(부당한 차별의 금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12(청산증거금) ① 청산대상업자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금전등으로 청산증거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인정하는 청산

대상거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청산대상업자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하여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대상업자의 청산증거금으로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38조의13(손해배상공동기금) ① 청산대상업자는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금전등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청산대상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대상업자(제1항 단서에 따른 청산대상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범위에서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③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전한 경우에는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에 대하여 그 보전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④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제4항에 따라 추심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에 충당한다.

⑤ 제1항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 적립방법, 사용·관리·환급 및 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14(채무변제순위) ① 청산대상업자가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또는 다른 청산대상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또는 다른 청산대상업자는 그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의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청산대상업자가 결제를 위하여 납부한 결제대금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결제의 완료 전에 결제대금이 지급된 경우에 해당 청산대상업자가 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청산대상업자의 재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그 결제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제38조의15(청산증거금 등에 대한 적용배제) 제38조의12부터 제38조의14까지의 규정은 제38조의9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않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및 해당 기관의 청산대상업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16(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제38조의17(영업양도 등의 승인)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제38조의3제2항제1호가목의 자인 경우:
영업양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제38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자인 경우:
법인의 해산 또는 파산신청

제38조의18(주식소유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제38조의3제2항제1호가목의 자로 한정한다. 이 조 및 제38조의19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1.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주식의 소유로 본다.

1.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 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의19(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38조의18제4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후 그 기한 이내에 그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하고, 그 기한까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간,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8조의18제4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주식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의20(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준용규정) ①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1조의8까지, 제22조의4제2항·제3항, 제39조의2 및 제40조의3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준용한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준용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0조부터 제433조까지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8조의21(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

한 보고 또는 참고가 될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8조의22(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8조의6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4. 기관경고

5. 기관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

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
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
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허가의 취소

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임직원에 대
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
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7항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
용한다.

⑩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
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제10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⑬ 금융위원회는 제1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의2제2절(제38조의23 및 제38조의2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보안지원전담기관

제38조의2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무를 함에 따라 금융회사등이나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확산을 예방·대응하도록 하고, 금융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전담할 기관(이하 “보안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안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침해사고의 처리·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금융분야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구축 및 운영
 3. 금융분야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관제센터(전자적 침해행위에 관한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의 관리 및 운영
 4.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21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공유
 5. 금융회사등의 정보처리 업무수탁자에 대한 점검 및 안전성 평가 등의 지원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
- ③ 보안지원전담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1조의5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각 취약점 분석·평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업무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해당 법령에서 보안지원전담기관의 사업으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이 경우 보안지원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자의 사업으로 정

하거나 위탁한 사업을 포함한다.

나. 해당 법령에서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사업

5.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38조의24(보안지원전담기관에 대한 준용규정)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1조의7까지, 제38조의16, 제38조의21, 제38조의22, 제39조의2 및 제40조의3은 보안지원전담기관에 준용한다.

제4장의2제3절(제38조의25 및 제38조의2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전자금융협회

제38조의25(전자금융협회의 설립 등) ①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자금융업, 그 밖의 디지털금융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전자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회원에 대한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권고

3.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4. 전자금융업, 그 밖의 디지털금융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5. 전자금융업자가 제정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의 표준화 등에 관한 업무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④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회의 재원조성, 운영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6(전자금융협회에 대한 준용규정)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1조의8까지, 제38조의16, 제38조의21, 제38조의22, 제39조의2 및 제40조의3은 전자금융협회에 준용한다.

제5장의 제목 “전자금융업무의 감독”을 “감독 및 처분”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을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으로,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지키는지 여부”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로, “재무상태를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업무와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를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을 “검사의 방법·절차,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의2를 제39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39조의2) 제1항 중 “금융위원회(제39조제6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

을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로, “제39조제6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제4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금융보안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금융보안책임자를 통하여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점수 또는 등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점수 또는 등급이 미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금융보안의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점수·등급의 표시,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금융보안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를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 제목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수탁자등에 대한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이 조에서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을 “수탁자(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와 관련”으로, “때(전자금융보조업자가 다른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외부주문등에 관한”을 “경우(수탁자등이 다른 수탁자등과 해당”으로, “때를”을 “경우를”로, “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주문등”을 “제1항에 따른 수탁자등의 업무 수행”으로, “정하는”을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전자금융보조업자”를 “수탁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자금융보조업자가”를 “수탁자등이”로, “전자금융보조업자에”를 “수탁자등에”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금융보조업자”를 “수탁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주요수탁자 등에 대한 조사 등의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이
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에 따른 수탁자등의 업무가 전자금융거래의 안
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탁자등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탁자등(이하 이 조에서 “주요수탁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4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

1. 관련 계약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2. 관련 계약에 따른 업무 및 그와 관련한 재산상황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조사. 이 경우 제3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40조제5항 각 호의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주요수탁자등에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주요수탁자등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규 계약의 체결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의3(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이용자에탁금 및 가맹점에 정산할 대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 및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금융보안에 관한 사항

4. 전자금융업의 질서유지 및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각각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화폐발행자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자금이체업을 하는 금융회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및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회계처리)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업무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업무
2.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업무
3. 직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업무
4. 후불결제업무
5. 제2조제2호의5가목의 업무
6. 제2조제2호의5나목의 업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전자금융업자는 고유재산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의 제목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를 “(건전경영의 지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성과를 분석”을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예탁금, 가맹점에 정산할 대금 및 그 밖의 부채와 현금흐름 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전자금융업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 그 위험에 대응”으로,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을 “경영건전성을 확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전자금융사고”를 “전자금융업자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을 “다음”으로, “관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를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의 특성, 후불결제업무를 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경영지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2조제2항제1호 중 “자본의 적정성”을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상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산의 건전성”을 “전자금융업자의 지급능

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유동성”을 “전자금융업자의 위험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체업자”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등)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41조의2에 따른 회계처리 및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금융업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전자금융업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전자금융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 제목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을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전자금융업자(겸영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

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8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7.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0.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전자금융업을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금융업자가”를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을 “조치를 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다목·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마목·바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마목·바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외국 전자금융업자의 지점등의 허가·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전자금융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산
 2. 파산
 3.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멸
 4.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폐지 또는 허가·등록의 취소
 5.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하는 전자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중지 또는 정지
 6. 외국 법령을 위반한 경우(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이로 인해 영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외국 전자금융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외국 전자금융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1항에 따라 그 업무에 관련된 허가와 등록이 모두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산하여야 한다.

제43조의3(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의 임원이 제4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직원이 제4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다목·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마목·바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마목·바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다목·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마목·바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

·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마목·바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회사에게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44조 중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3.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4. 제43조의3에 따른 임직원에게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3조제1항·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43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와 제39조의3에 따라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⑤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이의신청) ① 제43조제2항 및 제43조의3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

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의 제목 “(합병·해산·폐업 등의 인가)”를 “(전자금융업자의 합병·영업양도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제28조제1항”으로, “받은 전자금융업자”를 “받거나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겸영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금융업무”를 “전자금융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와”를 “전자금융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1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4. 다른 회사 또는 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을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을 폐지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로 본다. 이 경우 제3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의2(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의 합병·영업양도 등에 대한 특례)

- ①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업자(겸영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종합지급결제사업자

2.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 또는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자금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6조의 제목 “(과징금)”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43조제2항”을 “별표 1”로,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5천만원 이하의”를 “업무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

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나 권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광고·권유를 지원하는 행위
2. 제3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제36조의3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오인하도록 한 행위
4. 제36조의3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행위
5. 제3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

제46조의2를 제46조의3으로 하고,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주요수탁자등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주요수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등의 100분의 50(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1.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제외한

다)가 제3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주요수탁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자금융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한 경우(제36조의10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제36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되는 업무를 한 경우

나. 제36조의10제2항에 따라 체결하여야 할 위탁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다. 제36조의10제3항에 따라 위탁제한이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고 그 업무를 한 경우

3. 주요수탁자등이 제36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요수탁자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장, 보안지원전담기관의 장, 전자금융협회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제26조”를 “제22조의2”로, “자를”을 “자, 제38조의16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제38조의24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보안

지원전담기관 및 제38조의26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전자금융협회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의4제2호”를 “제22조의3제2호”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을 “악성코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1조의4제3호”를 “제22조의3제3호”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전자금융기반시설, 그 밖의 정보자산”으로 한다.

1의2. 제22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 그 밖의 정보 자산에 접근하거나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여 전자금융사고·침해사고의 발생,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오류 또는 장애 등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을 발생 시킨 자

제49조제2항제1호 중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를 “접근매체 또는 전자지급수단(제2조제11호나목, 라목 및 바목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은 제외하며, 이 항에서 “접근매체등”이라 한다)을 위조·변조 또는 위작·변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을 “위조·변조 또는 위작·변작된 접근매체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접근매체를”을 “접근매체등을”로, “사용”을 “사용(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를 “접근매체등을 획득하거나”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를 “접근매체등을 이용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접근매체를”을 “접근매체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화폐는”을 “선불전자지급수단(제2조제14호나목 후단에 따라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

단은 제외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제6조의3을”을 “제6조의5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한 자

7.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허가
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8.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지급거래청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청산업에 관한 업무를 한 자

9.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지급
거래청산업허가를 받은 자

제49조제5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
호부터 제9호까지 중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각각 “전자결제”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종합지급
결제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9의2.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

게 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권유·광고한 자. 다만,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후불결제업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그 후불결제업무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제49조제6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전자결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인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동향”을 “같은 항”으로 한다.

1. 제3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금융업에 관한 광고나 권유를 한 자
2. 제36조의10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

제49조제7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의2”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3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1조제1항”으로,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를 “아니”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2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인력, 조직 및 예산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1의3. 제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건물, 설비 등 시설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1의4. 제21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업무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1의5. 제21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1의6. 제2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업무의 지속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1의7. 제21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재난 등에 대비한 비상대책, 비상대응훈련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1의8. 제21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위험 정도를 고려한 절차 및 통제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1의9. 제21조제2항제9호를 위반하여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주요수탁자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보안을 고려한 업무위탁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1의10. 제21조제2항제10호를 위반하여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와 정보

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1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의1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예탁금을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관리기관에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1의13.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한 이용자예탁금이나 이에 관한 청구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제51조제1항제2호 중 “전자화폐”를 “전자자금이체”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12까지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2조제1항”을 “제42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6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설하여 준 계정을 이용자로 하여금 계좌로 오인하게 한 자

2의3. 제36조의3제2항제2호나목을 위반하여 이용자예탁금을 재원으로 대부,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한 자

2의4. 제36조의3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 및 환급 기능을 결합하여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업무를 이용자에게 제

공한 자

2의5. 제36조의3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지급지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자금을 보유한 자

2의6. 제36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자금이체를 처리한 자

2의7. 제36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지급지시 전달업자를 차별하거나 그 지급지시의 처리를 거절한 자

2의8. 제36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자

2의9. 제36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이용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전자금융업무를 제공을 거절한 자

2의10. 제36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게 제38조의9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등을 하도록 하지 아니한 행위

2의11. 제36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

2의12. 제38조의7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3의2.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자

제51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의2

제1항”을 “제21조의3제1항”으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을 “금융보안책임자를 지정”으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을 “금융보안책임자를 사내이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1조의2제3항”을 “제21조의3제3항”으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금융보안책임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1조의3제1항”을 “제21조의5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1조의3제2항”을 “제21조의5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제5호의3,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시용매체로서 인증서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인증서로 선정한 자
- 1의2.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자
- 1의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의 발급·등록 및 사용·관리 등의 절차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 및 비대면거래의 유형별 위험의 정도를 반영하여 비대면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21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보안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의3. 제2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금융보안협의체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2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안내 또는 공지를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2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관리 행동매뉴얼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를 지키지 아니한 자

6의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제51조제2항제7호 중 “제40조제6항”을 “제36조의10제9항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선
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1조제4
항을 위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을 “제21조의2제2항
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1조의
3제1항”을 “제21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21조의5제1항”을 “제21조의6제1
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보고”를 “보고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
8조제1항 및 제2항”을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로 한다.

3의2. 제21조제2항제8호를 위반하여 금융보안 관련 교육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1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보안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중대사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

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36조의3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제37조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자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
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

2. 제15조, 제36조의3제2항제4호, 제36조의9, 제40조, 제40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2호의4·제2호의10·제2호의11·제3호의2의 개정규
정: 이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날

3. 제36조의4 및 제36조의5의 개정규정: 이 법 공포 후 종합지급결
제사업자 제도의 시행에 따른 금융혁신과 국민의 금융편의 도모,
은행업 등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공정한 전자금융거래 질서의 조성 등을 고려하여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디지털금융협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거래를 처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금융업의 광고·권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광고 또는 권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고에 의한 전자금융업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제2조제2호의2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업(부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업 또는 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 업은 제외한다)을 하고 있는 자는 그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31조의 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31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제31조의 요건을 갖

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종전에 하고 있는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인 중 제31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31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로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대행점으로 본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 중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운영대행사”라 한다)는 그 위탁이 종료될 때까지 제

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료 본다.

③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운영대행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대행사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운영대행사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대행사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3. 관계인의 출석

⑥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로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한 자 및 운영대행사는 해당 협약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위탁이 종료될 때까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거목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본다.

제6조(전자화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전자화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인증서 업무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서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평가·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8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동의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받은 동의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 및 환급 기능을 결합하여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금결제업 또는 결제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제35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금융결제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은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지급거래청산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결제원의 업무 중 한국은행이 결제기관으로서 청산대상업자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감축하는 장치를 마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38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 및 제38조의2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은 제36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거목 중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자금이체업, 제2조제2호의4에 따른 대금결제업, 제2조제2호의5에 따른 결제대행업(같은 조 같은 호 가목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③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은행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으로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3호 중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4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6항 중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제43조제1항제8호, 제43조의3제1항·제2항, 제46조제3항 관련)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거나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
2.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고 발급·등록한 경우
3.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인증서를 선정한 경우
4.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제36조의5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6.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7.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지침을 작성하거나 운용하지 않은 경우
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9.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인으로부터 미리 출금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전자자금이체의 특성에 따라 출금에 대한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10.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개설된 계좌와 연결하여 관리하지 않은 경우
1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인출 또는 전자자금이체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지 않은 경우
1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
14. 제2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인력, 조직 및 예산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5. 제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건물, 설비 등 시설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6. 제21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업무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7. 제21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8. 제2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업무의 지속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9. 제21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재난 등에 대비한 비상대책, 비상대응훈련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0. 제21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위험 정도를 고려한 절차 및 통제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1. 제21조제2항제8호를 위반하여 금융보안 관련 교육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2. 제21조제2항제9호를 위반하여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주요수탁자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보안을 고려한 업무위탁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3. 제21조제2항제10호를 위반하여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와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4.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금융회사등이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결정하지 않은 경우
25.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6.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보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융보안책임자를 사내이사 등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27.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금융보안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한 경우
28. 제21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보안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29. 제2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금융보안협의체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30. 제21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보안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1.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않거나 그 취약점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2.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

우

- 33. 제2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않은 경우
- 34. 제2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5. 제2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36. 제2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안내 또는 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37.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 38.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않은 경우
- 39. 제2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관리 행동매뉴얼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40.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41. 제2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경우
- 42.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않거나 게시 또는 통지하지 않은 경우
- 4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 44. 이용자예탁금의 예치, 신탁, 그 밖의 안전한 방법에 관련하여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4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 4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제29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 47.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48. 국내지점등이 제3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49.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경우
- 50.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51. 후불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제35조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 52. 제35조제8항에 따른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53.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54.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55. 제36조를 위반하여 해당 각 항에 규정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56.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나 권유 업무를 위탁받거나 지원한 경우
- 57. 제36조의3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 58. 제36조의3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 59. 제36조의3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 60. 제36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
- 61. 제36조의3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 62. 제36조의3제1항제6호를 위반한 경우
- 63. 제36조의3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
- 64. 제36조의3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경우
- 65. 제36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설하여 준 계정을 이용자로 하여금 계좌로 오인하게 한 경우
- 66. 제36조의3제2항제2호가목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이자 등을 제공한 경우
- 67. 제36조의3제2항제2호나목을 위반하여 금전의 대부,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 68. 제36조의3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제37조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경우
- 69. 제36조의3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 및 환급 기능을 결합하여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업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우
- 70. 제36조의3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지급지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자금을 보유한 경우
- 71. 제36조의3제3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위반하여 오인하도록 한 경우
- 72. 제36조의3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 73. 제36조의3제3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
- 74. 제3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 75. 제3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 76. 제36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지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자자금이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77. 제36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78. 제36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지급지시전달업자를 차별하거나 그 지급지시의 처리를 거절한 경우
79. 제36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80. 제36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이용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전자금융업무를 제공을 거절한 경우
81. 제36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업무를 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82. 제36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83. 제36조의10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84.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에 알리지 않은 경우
85.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86. 제3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청산증거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87. 제38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88. 제38조의18을 위반하여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89.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90.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경우
91.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92.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93.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경우
94. 제4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95.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96.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경우
97.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98.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99.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별표 2]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보안지원전담기관·전자금융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
분 사유**(제38조의2제1항제6호, 제2항, 제3항, 제4항, 제38조의24 및 제38조의
26 관련)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
2. 제2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인력, 조직 및 예산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건물, 설비 등 시설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제21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업무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제21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제2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업무의 지속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7. 제21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재난 등에 대비한 비상대책, 비상대응훈련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8. 제21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위험 정도를 고려한 절차 및 통제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9. 제21조제2항제8호를 위반하여 금융보안 관련 교육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 제21조제2항제9호를 위반하여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주요수탁자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보안을 고려한 업무위탁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1. 제21조제2항제10호를 위반하여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와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금융회사등이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결정하지 않은 경우
13.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14. 제21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보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융보안책임자를 사내이사 등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15.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금융보안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한 경우
16. 제21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보안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7. 제2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금융보안협의체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18. 제21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보안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9.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않거나 그 취약점을 분석·평가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20.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21. 제2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않은 경우
22. 제2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3. 제2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4. 제2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재난관리 행동매뉴얼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25.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26. 제36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이용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전자금융업무의 제공을 거절한 경우
27.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지급거래청 산업허가를 받은 경우
28. 제38조의6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29. 제38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0. 제38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31. 제38조의10을 위반하여 청산업무규정을 정하지 않거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32. 제38조의11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한 경우
33. 제38조의16을 위반한 경우
34. 제38조의17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하고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 전자금융 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금 융혁신과 ----- --- 도모하고 금융안정과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란 ----- ----- ----- ----- 제공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 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 ----- ----- ----- -----.		
<신 설>	1의2. “전자금융업무”란 전자금 용거래를 처리하는 업무 및 이에 수반되거나 밀접하게 관 련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자금업자 내부의 업무를 말한다.

2. “전자지급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거래지시에 따른 행위로서
----- 전자금융업자에게 자금을 맡기거나 이들로부터 자금을 인출하거나 --- 자금-----
-----.

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

나.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

다. 지급인을 대리하거나 대행하는 자

2의2. “전자금융업”이란 이익을 얻은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자금이체업

나. 대금결제업

다. 결제대행업

라. 지급지시전달업

2의3. “자금이체업”이란 전자자

<신 설>

금이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의4. “대금결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가목 또는 나목을 포함한 하나 이상의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그 발행의 대가로 수취한 자금의 관리를 포함한다)

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정산

<신 설>

2의5. “결제대행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3자가 발행한 전자지급수단의 이용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정산 및 가맹점에 지급하는 대금의 관리 업무

나. 이용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p><u>까지 결제대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업무</u></p> <p><u>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u></p>
<p><u><신 설></u></p>	<p><u>2의6. “지급지시전달업”이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지급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게 지급인의 지급지시를 전달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u></p>
<p>3.·4. (생략)</p> <p><u><신 설></u></p>	<p>3.·4. (현행과 같음)</p> <p><u>4의2. “자금이체업자”란 전자금융업자 중 자금이체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u></p>
<p><u><신 설></u></p>	<p><u>4의3. “대금결제업자”란 전자금융업자 중 대금결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u></p>
<p><u><신 설></u></p>	<p><u>4의4. “결제대행업자”란 전자금융업자 중 결제대행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u></p>
<p><u><신 설></u></p>	<p><u>4의5. “지급지시전달업자”란 전자금융업자 중 지급지시전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u></p>
<p><u><신 설></u></p>	<p><u>4의6. “종합지급결제사업자”란</u></p>

5.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
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
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
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
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6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겸영전자금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로서 전자금융업을 겸영
(兼營)하는 -----

-----.

가. 「은행법」에 따라 인가
를 받은 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
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융회사

5의2.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이
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

<신 설>

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지급거래(이하 “청산대상 거래”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를 차감하고 이에 따른 결제 금액을 확정하여 다음 각 목의 자(이하 “결제기관”이라 한다)에게 그 결제를 지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결제기관에 하는 결제의 지시를 대신하여 스스로 보유한 금전,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한다)으로 결제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전자지급거래청산업으로 본다.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나. 은행

다. 가목 및 나목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의3.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란 제38조의3에 따라 전자지급거래청산업허가를 받은

6. “결제중계시스템”이라 함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7.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 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자를 말한다.

6.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이란 전자지급수단, 업무규정, 정보자산 등을 비롯하여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운영체계-----.

7. “이용자”란 -----

----- 자(지급인 및 수취인
을 비롯하여 그 전자금융거래
계약에 따라 정당한 권리 또
는 이익을 가지는 자를 포함
한다)를 ---.

8. -----

----- 전화기, 스마트
· 모바일 기기 등의 -----

--.

9. (생략)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후단 신설>

가. (생략)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생략)

9. (현행과 같음)

10. “접근매체”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발급하거나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한 조회용매체나 지시용매체로서 --- 것을 -----.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이하 “비대면거래”라 한다)에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
----- 전자서명생성정보(이하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한다) -----
-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다. 거래지시를 위하여 일회성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전자적 장치 및 이에 준하는 수단 또는 정보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
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
요한 비밀번호

<신 설>

<신 설>

<신 설>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
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
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마. -----
----- 사용하거나 직접
거래지시를 하는 데에 필
요한 비밀번호 및 이에 준
하는 정보

바.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 또는 정보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 또는 정보

10의2. “조회용매체”란 전자금
융거래에서 거래내용을 조회
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이용자인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10의3. “지시용매체”란 전자금
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거래내용
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
는 정보를 말한다.

11. “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
의 지급지시를 개시하기 위하
여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
또는 이에 관한 업무절차로서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2.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자자금이체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다. 직불전자지급수단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마. 전자채권

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

--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개설된 계좌나 자금이체업자에 개설된 계정(금융회사 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개설된 계좌에 연결된 계정으로 한정한다----- 계좌나 계정으로 ----- 금융회사 또는 자금이체업자에 대한 지급인이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
업자에 대한 지급인의 지
급지시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
업자에 대한 수취인의 추
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1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
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
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
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
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
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유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
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
한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
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
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나 수취인의 지급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

<삭 제>

<삭 제>

1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
용자가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
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 금
융회사 또는 종합지급결제사
업자에 개설된 계좌나 자금이
채업자에 개설된 계정에서 자
금을 이동하게 하는 --- 재화
· 용역의 대가를 지급-----

-----.

14. -----

----- 저장(이하
“충전”이라 한다)되어 -----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신 설>

---. <단서 삭제>

가. 발행인 외의 제3자(발행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나. 발행인은 재화·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기 전에 이용자로부터 충전의 대가를 지급받을 것. 이 경우 발행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용실적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적립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경제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실적 등을 충전의 대가의 지급으로 본다.

다. 가목에 따른 사용으로 해당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제3자가 그 저장된 금전적 가

<신 설>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 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

치에 대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발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 것

라. 다목에 따른 권리가 해당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에 표시될 것

<삭 제>

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
될 것

16. “전자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자문
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금전채
권을 말한다.

가.·나. (생략)

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
을 것

라.·마. (생략)

17. (생략)

<신설>

18.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
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
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
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
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
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

16.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평
가·인정을 받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생성된 전자서명

라.·마.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17의2. “지급지시”란 전자지급
거래의 처리를 요청하는 거래
지시를 말한다.

18. -----
----- 비대면거
래가 -----

--.

<삭제>

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
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
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
하는 것을 말한다.

20.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회
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
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
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
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
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
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신 설>

20. -----

----- 전자지급수단에 의
한 거래에서 -----

-----.

20의2. “금융보안”이란 다음 각
목의 위험으로부터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
보하고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자적 침해행위

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정보처리시스템·정보통
신망의 장애, 부적절한 업

<신 설>

무절차, 임직원의 과오(過誤) 등으로 인하여 회사 또는 법인의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험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

20의3. “정보자산”이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그 자로부터 정보처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정보자산보유자”라 한다)에서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정보, 정보처리시스템, 정보통신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보자산보유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고유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외에 다른 업(業)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유업무나 금융업무와 관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신 설>

<신 설>

21. “전자금융기반시설”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2.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20의4.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정보를 처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를 말하며, “신용정보”는 “정보”로 본다)하거나 그 정보를 송신·수신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것(「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의5.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1. “전자금융기반시설”이란 정보자산으로서 ----- 정보통신망 -----
22. ----- 악성코드 감염, 서비스거부 -----

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 공격
하거나 정보자산의 관리·운
영을 방해하는 -----

--.

23. “금융플랫폼”이란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
자로 이루어진 둘 이상의 집
단 사이에 상호작용을 목적으
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
공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홈
페이지[스마트·모바일 기기
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
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및 이에 준
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와 이용자 사이에 금융상
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리,
중개나 주선을 하는 행위

나.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로부터 요청을 받아 이용
자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스에 대한 홍보나 정보제공 등을 하는 행위
다. 이용자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교분석, 추천 등을 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조(전자금융거래 등의 적용배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1. 금융상품의 제공 과정에 수반되지 않거나 밀접한 관련이 없는 정보의 처리
2.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리, 수수료, 환율 등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에 대하여 광고 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그 사실을 알리거나 안내하는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
4. 「어음법」에 따른 어음 또

<신 설>

<신 설>

는 「수표법」에 따른 수표를
이용하는 거래로서 전자적 방
식으로 처리하지 않는 거래

5. 그 밖에 해당 전자금융거래
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
금융거래에서 제외하더라도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거
래로 보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2. 그 밖에 해당 전자지급거래
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
지급거래에서 제외하더라도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업

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대금결제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2.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대금결제업

3. 그 밖에 해당 전자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금융업에서 제외하더라도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5장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준수
2. 제21조제4항의 정보기술부문의 계획수립 및 제출
3. 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4. 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신 설>

④ 제21조의2제2항·제3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제21조의6제1항, 제22조의4 및 제5장-----
--.

⑤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중에서 ----- 금융회사등에 -----
-----.

1.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
2. 제21조의3의 금융보안책임자 지정
3. 제21조의4에 따른 금융보안계획의 수립 및 제출
4. 제21조의5-----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자금융거래 및 금융보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호주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는 제27조의2제2호·제3호 및 제36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23호가목의 금융플랫폼 : 해당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관여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

2. 제2조제2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플랫폼 : 해당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 결정에 관한 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

제4조(역외적용 등) ①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 <단서 삭제>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하
거나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
를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
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
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
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
하여는 그에 상응하여 이 법 또
는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
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의2(전자금융발전계획의 수
립) 정부는 전자금융거래의 안
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
금융거래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
항에 관한 계획(이하 “전자금융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세울 수
있다.

1.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금융거
래의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2. 혁신적인 전자금융업의 건전
한 육성에 관한 사항
3. 투명하고 효율적인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신 설>

4.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금융보안에 관한 사항

제4조의3(디지털금융협의회) ① 4

차 산업혁명, 데이터경제 등 금
융분야의 디지털전환에 능동적
으로 대응하고, 디지털금융 분
야의 안정과 혁신에 관한 정책
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에 디지털금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둔
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 전자금융발전계획에 관한 사
항

2.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
털금융의 활성화 및 금융분야
에서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및
금융보안 등에 관한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금융분야에서의 지능정보화
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그
밖의 금융분야의 혁신사업자
간 공정한 전자금융거래 질서

<신 설>

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디지털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장이 토의에 부
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5조의2(접근매체 사용의 원칙

등)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
업자나 이용자는 발급·등록된
접근매체에 대하여 해당 이용자
및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외
의 제3자에 의하여 그 접근매체
가 사용·관리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접근매체가 사
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
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
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에 관한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하여서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생략)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생략)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는 아니 되며, 전자금융거래에서 다양한 접근매체가 개발·이용되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발급하거나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접근매체를 등록할 --
발급·등록하여야 -----
-----.

----- 발급·등록 --.

1.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2. (현행과 같음)

③ -----

---. ----- 선불전자지급수단-----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④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1. ~ 5. (현행과 같음)

④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그 이
용자인지 여부를 -----
--.

⑤ 제2항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
의 방법 및 절차, 제4항--- 이
용자 여부의 확인을 --- 이용
자확인 방법-----.

제6조의2(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
는 인증서 요건 등) ① 금융회
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지시용
매체로서 인증서를 선정하는 경
우에는 「전자서명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지시용매체로서
인증서에 관한 전자서명인증업
무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인증서
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
융위원회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
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
서명인증사업자(이하 “전자서
명인증사업자”라 한다)는 지시
용매체로서 인증서에 관한 업무
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전
자서명법」 제10조에 따른 평가
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
를 받고, 「전자서명법」 제9조
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지시용매체로
서 선정된 인증서가 전자금융거
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심
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장관에게 전자서명인증사업

<신 설>

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금융위원회와의 공동 조사를 포함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3(전자금융거래에서 실명 확인 방법 등에 관한 특례) ① 금융회사는 비대면거래가 아닌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지명의(이하 이 조에서 “실지명의”라 한다)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비대면거래에서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라 정하는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서류로서 주민등록증,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증표·서류의 사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식에 따라 제출하는 방법

2. 금융회사의 종사자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증표·서류의 사본 상의 사진을 확인함으로써 영상통화 등으로 이용자와 대조하는 방법

3. 해당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개설된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전자자금이체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자가 그 계좌를 정당하게 보유하는 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통하여 이용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5. 그 밖에 비대면거래에서 이용자를 확인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6조의2(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오류의 정정 등)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

제6조의4(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6조의5(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

-----.

제8조(오류의 정정 등) ① -----
-- 비대면거래-----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비대면거래-----

-----.

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 -----
----- 이용자의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거나 그 거래지시·동의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비대면거래-----
-----.

<삭 제>

<삭 제>

<삭 제>

② -----

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신 설>

<신 설>

-----.

1. 제1항의 비대면거래에 -----

1의2. 이용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대면거래를 한 경우

1의3. 이용자가 제1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비대면거래를 처리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그 통지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2. (생략)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④ (생략)

<신설>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해당 통지의무가 이행되기 전에 제10조의2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

제6조제3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부담하는 이용자의 의무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이용자의 입증부담 경감) ① 이용자가 제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증명할 책임을 진다.

1. 해당 비대면거래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영역 외에서 발생한 사실

2. 이용자의 거래지시나 동의에 따라 오류 없이 비대면거래를

제10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처리한 사실

3. 이용자가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통지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증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면의 사유를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10조(접근매체 등의 분실과 도난 책임) ① ----- 접근매체 또는 전자지급수단의 ----- 접근매체나 전자지급수단을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지급수단-----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비대면거래 등에 관한 이용자의 협력의무) ① 이용자는 전자지급수단 및 접근매체에 관하여 이 법 및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부터 전자지급수단 또는 접근매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전자지급수단이나 접근매체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비대면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거래지시나 동의 없이 처리된 비대면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2. 거래지시나 동의에 따라 비대면거래가 처리되지 아니한 사실
3. 접근매체 또는 전자지급수단의 분실·도난 등의 사실

제11조(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①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전자채권관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행하는 각종 통지를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

제11조(접근매체 사용에 관한 절차 등)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발급·등록 및 사용·관리 등의 절차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 및 비대면거래의 유형별 위험의 정도를 반영하여 비대면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업무지침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높은 비대면거래에서 이용자에게 지시용매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접근매체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접근매체를 중첩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접근매체, 그 밖에 이용

자만이 소유·지배하는 수단
또는 정보

2. 제2조제10호라목의 접근매
체, 그 밖에 이용자의 신체적
· 행동적 특징을 컴퓨터 등에
서 처리할 수 있도록 생성한
정보

3. 제2조제10호마목의 접근매
체, 그 밖에 이용자만이 알고
있는 정보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는 비대면거래에서 거래지시의
목적 또는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의 확인 목적으로는 이용
자에게 조회용매체를 사용하도
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와 이
용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9조제1항
에 해당하는 비대면거래로 인하
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지시용매

	<u>체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u> 2. 제3항 단서에 따른 약정에 따 <u>라 조회용매체를 사용하도록</u> <u>경우</u>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 <u>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경우</u>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비대면거래를 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 <u>니한다.</u>
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 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긴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u>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u> <u>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u> <u>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u> <u>이 끝난 때</u> 2. (생 략) 3. <u>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u>	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① ----- ----- ----- -----. 1. ----- ----- <u>금융회사 또는 종합지급결제</u> <u>사업자에 개설된 수취인의 계</u> <u>좌나 자금이체업자에 개설된</u> <u>수취인의 계정</u> ----- ----- 2. (현행과 같음) 3. <u>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u> -----

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
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
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
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
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생략)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
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후단 신
설>

<신 설>

<신 설>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제3호의 경우
와 유사한 때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수취인의 지급지시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동의 등)

- ① -----
--- 수취인의 지급지시에 따른
전자자금이체-----
대통령령으로 -----
----- 받아야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전자자금이체의 특성에 따
라 출금에 대한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의 유
무
2. 제1호에 따른 제공을 하는 자

<신 설>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①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화폐발행자”라 한다)는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접근매체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와 수취인이 동일인인지 여부

3. 해당 출금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② ----- 지급지시-----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자금이체업자의 환금 등)

① 자금이체업자(겸영전자금융업자로서 자금이체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전자자금이체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개설된 해당 이용자의 계좌와 -----

-----,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가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업무를 하는 -----.

② 전자화폐발행자는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전자화폐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
보유자가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전자화폐의 보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④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
보유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화폐
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교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전자화폐보유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수취인과의 합의에 따라
전자화폐로 지급한 때에는 그
대금의 지급에 관한 채무는 변
제된 것으로 본다.

<삭 제>

<삭 제>

② 자금이체업자는 이용자로부
터 예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등으로 인출하거나
전자자금이체를 요청받은 경우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출 및 전자
자금이체의 방법과 -----
-----대해서는
-----.

제17조(전자자금이체에 의한 채무
변제) 이용자가 자금-----

전자자금을 통하여 금융회
사 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개설된 수취인의 계좌로 ---
자금의 -----
-----.

제18조(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①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 또는 전자화폐 보유자는 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명의를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전자채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

제18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성) ①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

②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
-----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
----- 이용자의 신원이 -----
----- 선불전자지급수단-----.

제20조(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

-----.

1. -----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2. (생략)

② (생략)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신 설>

<신 설>

생성된 전자서명-----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금융보안 및 이용자

보호

제1절 금융보안

제20조의2(금융보안의 원칙)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정보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접근권한이 없는 자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정보자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2. 정보자산을 훼손·멸실하거나 무단으로 사용·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 정보자산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전자금융업무에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정보자산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2조제20호의2 각 목의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전자금융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

2. 위험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자산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지배구조와 내부 조직을 구성·운영할 때 이사회부터 임직원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금융보안에 관한 책무를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이사회(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금융보안에 관한 중

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그 업무를 집행할 최종적인 책무가 있다.

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조직을 구성·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보안에 관한 전사적(全社的)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부 조직은 정보기술부문으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1. 회사 또는 법인의 규모

2.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3. 제2조제20호의2 각 목의 위험이 전자금융기반시설, 그 밖의 정보자산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

⑥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거나 그 거래지시·동의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사고(이하 “전자금융사고”라 한다),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정보자산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등에 미리 대비하고, 해당 사고가 발생한 때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에 그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내부 조직 간이나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상호 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⑦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무나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업무를 제3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보안을 고려한 업무위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하며, 이 절 및 제38조의23, 제39조의2에서 같다)는 전자금융거래와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 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1. 제36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른 수탁자(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자

2.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와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 전자금융거래와
정보자산의 관리·운영-----
----- 다음 각 호의 사항--

- ## 1. 인력, 조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 2. 건물, 설비 등 시설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

3. 전자금융업무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4. 정보처리시스템,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에 관한 사항

5. 전자금융업무의 지속성에 관한 사항

6. 재난 등에 대비한 비상대책, 비상대응훈련 등에 관한 사항

7. 전자금융거래의 위험 정도를 고려한 절차 및 통제에 관한 사항

8. 금융보안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9.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주요 수탁자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보안을 고려한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와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③ ----- 제2항에 따른 -----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 및 법인의 규모, 처리하는 전자금융업무, 업무위탁의

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중요성 등의 특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21조의2(이사회 등의 책무 등)

① 금융보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등의 이사회(금융회사등이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3제5항에서 같다)가 결정한다.

1. 전사적(全社的)인 금융보안 체계에 관한 사항
2. 전자금융업무의 지속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전자금융사고와 침해사고 등에 따른 피해 및 그 확산의 방

지에 관한 기본사항

4.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금융회사등이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하는 기관의 구성·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하여 정관을 변경하기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관의 구성·운영 및 권한 등이 전자금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변경, 그 권한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

④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금융보안책임자) ① 금

용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보안책임자-----.

② ----- 고려하여 ----- 금융회사등은 금융보안책임자를 사내이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③ ----- 고려하여 ----- 금융회사등의 금융보안책임자-----.

④ 금융보안책임자-----.

1. -----

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
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
획의 수립

2.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3.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
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4.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신 설>

5.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
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전략-----

2. 제21조의4에 따른 금융보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금융보안-----

4. 전자금융사고 및 침해사고
등의 -----
--

4의2.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사회결정을
지원하는 업무

5. ----- 전자금융거래 및 정
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

⑤ 금융보안책임자는 전자금융
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운영
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안 업
무의 집행현황을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
사등의 금융보안책임자는 대통

<신 설>

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안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금융회사등은 전사적인 관점에서 전자금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보안책임자가 주관하는 내부 조직의 협의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하는 금융보안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의 업무
2. 이용자 보호에 관한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 나. 준법감시인의 업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신 설>

<신 설>

⑧ 금융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제5항에 따른 보고의 시기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점검과 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금융보안계획의 수립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전사적인 관점에서 전자금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보안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예산, 추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금융보안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한다)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1조의4(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③ 제2항에 따른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5(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① 금융회사등은 -----

-----.

1. ~ 4.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등은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

-----.

1. -----

<p>자가 <u>전자금융기반시설</u>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후단 신설></p> <p>2. <u>전자금융기반시설</u>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u>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u>을 방해할 목적으로 <u>컴퓨터 바이러스</u>, <u>논리폭탄</u> 또는 <u>메일폭탄</u>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p> <p>3. <u>전자금융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u>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u>전자금융기반시설</u>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p> <p>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p> <p>① <u>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u>는</p>	<p>-- <u>전자금융기반시설, 그 밖의 정보자산</u>-----</p> <p>-----</p> <p>-----</p> <p>----- 행위. 이 경우 전자금융사고·침해사고의 발생,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오류 또는 장애 등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p> <p>2. <u>전자금융기반시설, 그 밖의 정보자산</u>에 ----- 그 관리·운영-----</p> <p>----- 악성코드 -----</p> <p>-----</p> <p>3. <u>전자금융기반시설, 그 밖의 정보자산의 안정적 관리·운영</u>-----</p> <p>-----</p> <p>-----</p> <p>----- 전자금융기반시설, 그 밖의 정보자산에 -</p> <p>-----</p> <p>제21조의6(침해사고의 통지 등)</p> <p>① <u>금융회사등</u>은 -----</p>
---	--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
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
는 등의 사고(이하 “침해사고”
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
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
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 ① ·

② (생략)

<신설>

----- 전자
금융기반시설, 그 밖의 정보자
산----- 침해사고-----

② 금융회사등은 -----

제21조의7(침해사고의 대응)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8(침해사고 등의 정보 공

유 등) ① 금융회사, 전자금융업
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는 전자금융거래 및 정
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
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8조의23에 따라 지정된 보안
지원전담기관,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
서 “보안지원전담기관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금융회사등 사
이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
공하거나 이용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1. 전자적 침해행위 및 침해사
고에 관한 정보

2.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전
자금융업무에서 다양한 정보
를 수집·분석하여 비정상적
인 전자금융거래를 탐지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을 통하여 수집되거나
탐지된 정보로서 비정상적
인 전자금융거래, 그 밖에 비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에 관
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
를 분석·가공한 정보. 이 경
우 보안지원전담기관등이 분
석·가공한 정보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 및 정
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해서는 제22조의2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 설>

<신 설>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제4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
3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
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③ 제1항에 따른 제공·이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9(이용자 유의사항의 안
내 등) ① 금융회사등은 이용자
에게 접근매체의 관리, 전자금
융사고·침해사고가 발생한 경
우의 처리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내 또
는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또는 공
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다.

제22조의4(금융분야의 재난관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의 안정과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기본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 행동매뉴얼을 수립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사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정보처리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 등의 장애로 전자금융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경우

<신 설>

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 한도)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2.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 행동 매뉴얼의 세부사항,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 보호

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 한도) ① -----

-----.

1.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한도. 이 경우 제2조제14호나목 후단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는 그 경제상의 이익을 해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 ①
----- 전자금융업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
며,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

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
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
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
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에 대한 보고의 시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
다.

④ (생략)

<신설>

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
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

---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
하여 고시하는 -----

-----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보고 및 신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회사의 비대면거래가 아
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제24조 및 제25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
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① -----

--- 할 때 -----

--- 받지 -----

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신설>

<신설>

--. <단서 삭제>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은행법」 제21조의2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제26조(이용자예탁금의 보호) ① 자금이체업자 또는 대금결제업자(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용자에게
탁금(이용자로부터 전자지급거
래와 관련하여 받은 금전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이용예탁금을 고유재
산과 구분하여 은행,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
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
하여 예치(預置), 신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
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자금이체업자: 이용예탁금
전액

2. 대금결제업자: 이용예탁금
중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자금이체업자 또는 대금결제
업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
을 통하여 이용예탁금을 관리
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예탁금
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자금이체업자 또는 대금결제

업자는 이용자예탁금에 관한 행
위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
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
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기관에 대하여 별도관리
에 관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
는 행위

2. 관리기관에 대하여 별도관리
에 관한 계약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3. 관리기관으로부터 이용자예
탁금을 인출하는 행위(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
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
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한 이용
자예탁금에 관한 자금이체업자
또는 대금결제업자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상계(相計)·압류(가
압류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⑤ 이용자예탁금을 별도관리한 자금이체업자 또는 대금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한 이용자예탁금이나 이에 관한 청구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이용자예탁금을 별도관리한 자금이체업자 또는 대금결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별도관리한 이용자예탁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지급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과 이용자예탁금의 지급시기·지급장소, 그 밖에 이용자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말소

2. 회사 또는 법인의 해산의 결의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43조제2항의 전자금융업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같은 항에 따라 자금이체업자 또는 대금결제업자로부터 이용자에탁금을 직접 지급받기에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용자에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등이 이용자에게 이용자에탁금을 지급하면 자금이체업자 또는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관리기관등의 지급채무 및 이용자에 대한 자금이체업자 또는 대금결제업자의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각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⑧ 이용자예탁금을 별도관리한 자금이체업자나 대금결제업자 또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그 자금이체업자나 대금결제업자에 대하여 제36조의9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관리기관등이 제7항에 따른 이용자의 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의8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제7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용자예탁금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⑨ 이용자예탁금에 관한 청구권

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
용자등”이라 한다)는 자금이체
업자 또는 대금결제업자가 이용
자예탁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
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
액을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⑩ 관리기관이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이용자예탁금을 별도관리
한 자금이체업자 또는 대금결제
업자에게 별도관리된 이용자예
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
다.

⑪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
다.

1. 국채증권의 매수
2.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
한 채무증권의 매수
3.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
4. 그 밖에 이용자예탁금의 안

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
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

⑫ 제1항에 따라 자금이체업자
또는 대금결제업자가 관리기관
을 통하여 별도관리를 하여야
하는 이용자예탁금의 범위, 제1
항에 따른 별도관리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자금이체업자·
대금결제업자가 보유하는 이용
자예탁금의 운용방법, 제7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의 행사방법,
제9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구
체적인 범위 등에 대해서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
정은 겸영전자금융업자로서 자
금이체업이나 대금결제업(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를
하는 대금결제업으로 한정하
다)을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도 적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관리의 방법 및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
액 등에 관한 기준을 금융회사

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생략)

②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신설>

별로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해당 금융회사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용

되는 경영건전성 감독의 내용

2. 환(換)업무, 자금운용업무 등

해당 금융회사가 고유업무로

하는 금융업의 특성

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
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금융플랫폼 이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
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
자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자
금융거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
도록 함으로써 그 자가 그 업무
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p><u>발생시킨 경우에는 「민법」 제 756조를 준용한다.</u></p> <p><u>1.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u></p> <p><u>2. 그 밖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p>
<p>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과 등록) ① <u>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u>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과 등록) ① <u>자금이체업을 하려는</u> ----- ----- --. <u>다만, 은행,</u> ----- ----- <u>금융회사로서 계좌에 의한 전자 자금이체를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u> <u>는</u>-----.</p> <p>② ----- ----- -----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대해서 은행, - ----- <u>대통령령으로</u> ----- <u>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그 업</u></p>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
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를 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
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하는 자

가.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무를 할 수 있다.

1. 대금결제업
2. 결제대행업
3. 지급지시전달업

<삭 제>

<삭 제>

③ -----

-----.

1. 대금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제2조제14호나목 후단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
익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발행
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
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
에 가입한 -----

<삭 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나.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 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2.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삭 제>

<삭 제>

2.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분기별 가맹점에 대한 대가의 정산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나.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지급지시전달업은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지급거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④ 제3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장(제19조는 제외한다)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9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
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0조(자본금)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
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3항 제1호

(제20조의2, 제21
조의3, 제21조의4제2항, 제21조
의5

제39조 제1항, 제40조의3

제43조의3 제1항, 제46조, 제46조의3

⑤ -----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2항에 따른 등록-----
 ----.

제30조(자본금) ① -----
-----따라 자금이체업 허가를-----
-----자본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신 설>

1. 전자자금이체를 위해 이용자로부터 받은 자금과 분기별 전자자금이체된 금액이 각각 30억원 이하인 경우 :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신 설>

2. 전자자금이체를 위해 이용자로부터 받은 자금과 분기별 전자자금이체된 금액이 각각 100억원 이하인 경우 :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제1호-----
-----따라 대금결제업을-----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다음 ---
구분에 따른 -----

-----.

1.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발행잔액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의 분기별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28
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로
한정한다)

<신 설>

③ 제28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
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
법」 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
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출
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
이어야 한다.

1.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

가맹점에 대한 대가의 정산액
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 2억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발행
잔액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분기별
가맹점에 대한 대가의 정산액
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 5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③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결제대행업·지급지시전달
업과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전
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을 할--
-- 업무-----

-----.

1. 결제대행업: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른 금액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는 제외한다): 3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자: 5억원 이상으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신 설>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한 후 2
분기 이상 계속하여 제3항제1호
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자본금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가. 분기별 가맹점에 대한 대
가의 정산액이 100억원 이
하인 경우 : 2억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지급지시전달업 :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서 -----
3. 전자채권관리기관 : 5억원 이
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

④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거나
대금결제업 또는 결제대행업 등
록을 한 자가 그 허가 또는 등
록 후 2분기 이상 계속하여 자
본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
-----.

1. 자금이체업 자본금 기준이 3
0억원을 초과하고 100억원 이
하인 경우: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p><u><신 설></u></p>	<p>2. 자금이체업 자본금 기준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p>
<p><u><신 설></u></p>	<p>3. 대금결제업 자본금 기준이 30억원을 초과하고 100억원 이하인 경우 : 5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p>
<p><u><신 설></u></p>	<p>4. 대금결제업 자본금 기준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p>
<p><u><신 설></u></p>	<p>5. 결제대행업의 분기별 가맹점에 대한 대가의 정산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p>
<p>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 ①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호 및 제5호는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p> <p><u><신 설></u></p>	<p>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 ①</p> <p>-----</p> <p>-----</p> <p>-----</p> <p>-----.</p> <p>-----</p> <p>-----.</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p>

가. 「상법」에 따른 회사로
서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
른 회사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
가를 받는 경우: 주식회
사

2) 제28조제2항에 따른 등
록을 하는 경우: 주식회
사, 유한회사 및 유한책
임회사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
금결제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도록 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결제대행업
또는 전자채권관리기관으
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라. 외국 전자금융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전
자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
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하고

1. (생략)

2. ~ 4. (생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
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
한다.

<신설>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전
자금융업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출
자자 또는 외국 전자금융업자

② -----
-- 등록요건-----
----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제34조의2(외국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특례) ① 외국 전자금융업
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
다)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기
금은 이를 자본금으로 보고, 자
본금·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
금의 합계액은 이를 자기자본으
로 보며, 국내대표자는 사내이
사로 본다.

② 국내지점등은 제1항의 영업

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두어야 한다.

③ 국내지점등은 제26조에 따라 이용자예탁금에 대한 별도관리를 할 때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이용자의 이용자예탁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영업하는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내지점등이 청산·파산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에 두는 자산이나 자금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지점등의 대표자의 직무를 일시 대행할 자(이하 이 항에서 “직무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국내지점등은 그 사실을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무대행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

할 것을 그 국내지점등에 명령
할 수 있다.

1. 국내지점등의 대표자가 없거
나 대표자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
표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하
거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내지점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요구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제1호의 요구
에 따라 그 국내지점등에 대
하여 10일 이내에 대표자 또
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할 것을 요청할 것

3. 제2호의 요청을 받은 국내지
점등이 제2호에 따른 기간 이
내에 대표자 또는 직무대행자
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지 아니
할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된 사항 외에 결산에 관한 사
항 등 국내지점등의 전자금융업
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겸업제한)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아닌 업무는 이를 겸영하지 못한다.

1.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무 및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신 설>

<신 설>

제35조(겸영업무) ① 전자금융업자(겸영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를 할 수 있다.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그 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후불결제업무”라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업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

	<p><u>· 허가 · 등록 및 승인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금융소 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 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융업무</u></p>
<u><신 설></u>	<p>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업무</p>
<u><신 설></u>	<p>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 계자의 업무</p>
<u><신 설></u>	<p>7.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 서명인증업무</p>
<u><신 설></u>	<p>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 치기반서비스사업</p>
<u><신 설></u>	<p>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 스</p>
<u><신 설></u>	<p>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 관의 업무</p>
<u><신 설></u>	<p>1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p>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 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화폐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 아닌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신 설>

기간통신역무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12.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때에는 그 업무를 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겸영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③ 대금결제업자(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1. 이용자 본인이 신청할 것
2. 제1호에 따른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

<신 설>

<신 설>

인 자일 것

3.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후불결제업무에 따른 한도액이 대금결제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개인결제한도를 넘지 않을 것

4. 그 밖에 후불결제업무의 제공에 필요한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④ 대금결제업자는 제3항제3호에 따라 이용자별로 개인결제한도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체계를 갖출 것

2. 이용자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활용할 것

⑤ 대금결제업자는 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3

<신 설>

호에 따른 한도액과 후불결제업무 총제공한도를 지켜야 한다.
이 경우 후불결제업무 총제공한도의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대금결제업자는 후불결제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자예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후불결제업무의 재원(財源)으로 하는 행위

2. 스스로 신용을 공여한 것에 대한 이자(그 명칭이 무엇이든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경제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되, 지연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이용자로부터 받는 행위

3. 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는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신 설>

<신 설>

<신 설>

정하는 행위

⑦ 후불결제업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겸영업무 보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신 설>

⑩ 금융위원회는 제8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겸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2(부수업무) ① 전자금융업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부수하는 업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제2조제15호의 전자화폐가 아
닌 것에는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
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
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
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전자자금이체-----
----- 전자자금이체 또는 이
와 유사한 -----.

②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
호 중에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신 설>

② -----
자금이체업의 허가 또는 그 면
제----- 전자자금이체 또는 이
와 유사한 -----.

③ 후불결제업무가 아닌 것에는
후불결제업무, 소액후불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하지 못한다.

제36조의2(전자금융업에 관한 광
고·권유 등) ① 전자금융업자
(겸영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가 아닌 자는
자기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한 광고나 권유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제28조제1
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면제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전자금융업자가 하는 전자금
융업
2. 전자금융업자가 처리하는 전
자지급거래
3.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발행하거나 그 업무로 제공하

<신 설>

는 전자지급수단

② 제1항은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와 금융플랫폼을 통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광고나 권유를 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나 권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광고·권유를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광고나 권유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광고·권유의 내용, 금지되는 행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6조의3(전자금융업자 등의 행위규칙)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전자금융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별, 학력, 장애 및 사회적 신분 등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

2.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행위

3.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불확실한 내용 제시를 통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4. 이용자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지 않는 행위

5.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행위

6.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가 전자금융업무(이

용자의 권리 또는 이익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로 한정한다)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처리시스템으로만 전자금융업무를 처리할 때 해당 전자금융업무를 합리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체계를 갖추지 않는 행위

7. 제6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의 처리의 결과 및 주요기준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행위

8.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전자금융업자(겸영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다)는 전자금융업

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이체업자가 이용자에게 개설하여 준 계정을 이용자로 하여금 계좌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자금이체업자 또는 대금결제업자가 자금이체업무나 대금결제업무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이용자에게 예탁금에 대한 이자(이자와 유사하게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되, 제2조제14호나목 후단에 따른 경제상의 이익은 제외한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나. 이용자에게 예탁금을 재원으로 금전의 대부,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3. 대금결제업자 또는 결제대행업자(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하는 행위로서 제37조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행위

4. 대금결제업자(종합지급결제 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하는 행위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 및 환급 기능을 결합하여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업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지급지시전달업자가 하는 행위로서 이용자의 지급지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자금을 보유하는 행위

6.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직접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플랫폼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

회는 해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

2. 제2조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에 따라 해당 금융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업무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가.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나.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내용,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3.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할 의사가 없는 용역을 제공받도록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금융플랫폼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신 설>

제휴하는 경우에도 그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할 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는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의 종사자로 본다)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의10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6조의4(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금이체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영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금이체업자가 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하려는 업무에 대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자금이체업자 또는 자금이체업자가 되려는 자로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5(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의3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4조의3까지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준용한다.

1.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방법과 달리 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방법
2. 제1호에 따라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다른 금융회사 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개설된 계좌를 포함한다)로 하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②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다.

③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전자

자금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나 직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업
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는
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라 자금이체업과 대금
결제업을 할 수 있다.

④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제1
항에 따라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다른 청산대
상업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목적으로 전자지급거래청산기
관 또는 결제기관에 예치한 금
액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예탁금으로서 별도
관리되는 금액으로 본다.

⑤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의2제
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지급결
제사업자는 전자금융업 외의 다
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업무

2.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소유
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신 설>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그 밖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경영건전성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금융위원회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 기준을 자금이체업자, 대금결제업자 및 결제대행업자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6(전자지급거래의 처리에 관한 원칙) ①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전자지급거래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업무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금융안정과 금융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다른 전자금융업자(은행이나 겸영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

<신 설>

요한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
켜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다른 전
자금금융업자를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전자지급거래에서 발생
하는 위험의 수준에 상응하게
그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할 것

제36조의7(지급지시전달업의 법
률관계) ① 금융회사 또는 종합
지급결제사업자는 지급지시전
달업자(겸영전자금융업자로서
지급지시전달업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통하여 이용자의 전자자금이
체에 관한 지급지시를 받은 경
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지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
지로 그 전자자금이체를 처리하
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또는 종합지급결제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자
금이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를 받아 전자자금이체를 처리한 이용자의 계좌에서 해당 지급지시 전달업자를 통하여 전자자금이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③ 금융회사 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자금이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시 전달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직접 지급지시 전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지급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급지시 전달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지급지시를 받을 수 있다.

④ 금융회사 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지급지시를 처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신 설>

지급지시전달업자를 차별하거나 그 지급지시의 처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금융회사 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지급지시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방식을 운영하는 비용 등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지시전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지급지시전달업자에 불리하게 부담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8(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의 개방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효율적인 전

자금융업무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사업자”라 한다)에게 개방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지정을 할 때에는 미리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 또는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업무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및 제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이용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전자금융업무의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이용사업자와 제공사업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2. 이용사업자와 제공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금융보안에 관한 사항
3. 이용사업자, 제공사업자 및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간 전자금융업무의 제공에 관한 기술의 표준화
4.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효율적인 전자금융업무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신 설>

하는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9(전자지급거래의 청산

의무) ① 전자지급거래의 빈도, 회사 또는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지급거래(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상대방이 같은 전자금융업자인 전자지급거래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하여금 제38조의9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의8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신 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지급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수취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해당 전자지급거래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제38
조의9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
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36조의10(전자금융업자 등의 업
무위탁) ① 전자금융업자(겸영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에서 같다)
는 전자금융업의 일부를 제3자
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
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업무위탁을 받는 제3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건전성

을 저해하는 경우

2. 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전자금융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외국 전자금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전자금융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저해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전자금융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⑥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정보 보호 및 위험관리·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⑦ 「민법」 제756조는 수탁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준용한다.

⑧ 이용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에게 하는 각종 통지를 수탁자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에게 한 통지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재위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p><u>준용한다.</u></p> <p><u>⑩ 업무위탁·재위탁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①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①
가맹점은 <u>직불전자지급수단</u> 이나 <u>선불전자지급수단</u> 또는 <u>전자화폐</u> (이하 “ <u>전자화폐등</u> ”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 <u>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u> (이하 “ <u>전자결제</u> ”라 한다)-----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 -----.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u>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u> 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1. ----- -- <u>전자결제</u> ----- ----- --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u>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u> 를 하는 행위	2. ----- <u>전자결제</u> ----- -----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u>전자</u>	3. ----- <u>전자</u>

<u>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u>	<u>결제</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u>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u> <u>대행하는 행위</u>	5. <u>전자결제</u> ----- -----
<u><신설></u>	6. <u>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u>
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u>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u>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 <u>전자결제</u> ----- -----.
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 ① (생략)	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 ----- ----- -----.

1.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
맹점에 알려야 한다.

1. 가맹점수수료

2. · 3. (생략)

④ (생략)

<신설>

<신설>

<신설>

1. ----- 전자지급
수단-----

2. 위조·변조 또는 위작·변작
된 전자지급수단-----

③ -----

-----.

1. 가맹점수수료의 세부내용 및
산정기준

2.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장의2

전자금융거래관계기관

제1절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제38조의2(무허가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자지
급거래청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신 설>

직접 또는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로서 전자지급거래청 산업을 할 것

2. 청산대상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산대상업자의 결제 불이행 위험을 감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

3. 청산대상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의 차감을 통하여 전자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② 제38조의8, 제38조의10부터 제38조의15까지, 제38조의22(제1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자가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8조의3(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허가) ①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전자지급거래청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지급거래 청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

2. 2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기본재산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신 설>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가. 전자지급거래청산업허가
를 받으려는 자가 제1호가
목의 자인 경우: 대주주(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
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
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전자지급거래청산업허가
를 받으려는 자가 제1호나
목의 자인 경우: 결의권이
있는 사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
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38조의4(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
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허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 거래청산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신 설>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허가의 내용

2. 허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허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등 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허가심사의 방법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5(예비허가) ① 제38조의 3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업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38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허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허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38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신 설>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예비허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예비
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
비허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예비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6(허가요건의 유지) 전자
지급거래청산기관은 제38조의3
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업허
가를 받아 그 업무를 함에 있어
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허가
요건(제8호는 제외한다)을 유지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8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아닌
자는 “전자지급거래청산”, “지
급거래청산”, “지급청산”, “청산
거래”, “지급결제청산”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8조의8(임원 등) ① 전자지급
거래청산기관의 상근임원은 전

<신 설>

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게 제38조의9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청산대상업자의 임직원 외의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상근 임직원은 청산대상업자 및 전자금융거래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9(업무) ①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청산대상거래의 확인 업무
2. 청산대상거래와 관련한 지급지시를 청산대상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3. 청산대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차감 업무

4. 결제할 금액을 확정하고 결제기관에게 결제를 지시하는 업무. 이 경우, 결제의 지시를 대신하여 스스로 보유한 금전 등으로 결제를 처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5.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채무부담업무

6.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업무

②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수행을 위탁 또는 지정받은 업무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해당 업무를 하더라도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신 설>

다른 법률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8조의10(청산업무규정 등) ①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청산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정

관 및 제1항의 청산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청산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제38조의9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청산대상거래에 관한 사항
2. 청산대상업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3. 전자지급거래청산업으로서 행하는 채무의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부담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4. 청산대상업자의 채무의 이행 확보에 관한 사항
5.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에 관한 사항
6. 청산대상업자가 아닌 자가 청산대상업자를 통하여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하여금 청산대상거래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그 전자지급

<신 설>

<신 설>

거래청산의 중개·주선이나
대리에 관한 사항

7. 외국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에
서 전자지급거래청산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를 말한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8조의11(부당한 차별의 금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정당
한 사유 없이 특정한 청산대상
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38조의12(청산증거금) ① 청산
대상업자는 전자지급거래청산
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청산업
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금전
등으로 청산증거금을 예치하여
야 한다. 다만, 전자지급거래청
산기관이 인정하는 청산대상거

<신 설>

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청
산대상업자가 전자지급거래청
산기관에 대하여 청산대상거래
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대상업자
의 청산증거금으로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38조의13(손해배상공동기금) ①

청산대상업자는 청산대상거래
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전자지급거래청산
기관에 금전등으로 손해배상공
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
만,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청산대상업자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대상업자(제1항 단서에
따른 청산대상업자는 제외한다)
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배상
공동기금의 범위에서 청산대상
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

<신 설>

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③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전한 경우에는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에 대하여 그 보전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④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제4항에 따라 추심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에 충당한다.

⑤ 제1항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 적립방법, 사용·관리·환급 및 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14(채무변제순위) ① 청산대상업자가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또는 다른 청산대상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또는 다른 청산대상업자는 그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의 청산증거금 및 손

해배상공동기금 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청산대상업자가 결제를 위하여 납부한 결제대금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결제의 완료 전에 결제대금이 지급된 경우에 해당 청산대상업자가 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청산대상업자의 재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그 결제의 이행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신 설>

제38조의15(청산증거금 등에 대한 적용배제) 제38조의12부터 제38

<신 설>

<신 설>

<신 설>

조의14까지의 규정은 제38조의 9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않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및 해당 기관의 청산대상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16(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제38조의17(영업양도 등의 승인)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제38조의3제2항제1호가목의 자인 경우: 영업양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제38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자인 경우: 법인의 해산 또는 파산 신청

제38조의18(주식소유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제38조의3제2항제1호가목의 자로 한정한다. 이 조 및 제38조의19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1.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주식의 소유로 본다.

1. 신탁계약, 그 밖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 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신 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의19(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38조의18제4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후 그 기한 이내에 그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하고, 그 기한까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써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간,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8조의18제4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주식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

<신 설>

야 한다.

제38조의20(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준용규정) ①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1조의8까지, 제22조의4제2항·제3항, 제39조의2 및 제40조의3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준용한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준용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0조부터 제433조까지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 설>

제38조의21(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참고가 될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

<신 설>

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8조의22(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허

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38조의6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4. 기관경고

5. 기관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 호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
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의 직원이 제1항 각 호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
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
4항에 따라 전자지급거래청산
기관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전자지급거래 청산업허가의 취소

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7항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⑩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제10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

<신 설>
<신 설>

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⑬ 금융위원회는 제1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절 보안지원전담기관

제38조의2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무를 함에 따라 금융회사등이나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확산을 예방·대응하도록 하고, 금융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전담할 기관(이하 “보안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안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침해 사고의 처리·원인분석 및 대응체계 운영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 16조에 따른 금융분야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구축 및 운영

3. 금융분야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관제센터(전자적 침해행위에 관한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한다)의 관리 및 운영

4.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21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공유

5. 금융회사등의 정보처리 업무수탁자에 대한 점검 및 안전성 평가 등의 지원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

을 받은 사업

③ 보안지원전담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1조의5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각 취약점 분석·평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업무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해당 법령에서 보안지원 전담기관의 사업으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이 경우 보안지원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자의 사업으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을 포함한다.

나. 해당 법령에서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

<신 설>

<신 설>

<신 설>

고 등을 한 사업

5.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38조의24(보안지원전담기관에 대한 준용규정)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1조의7까지, 제38조의16, 제38조의21, 제38조의22, 제39조의2 및 제40조의3은 보안지원전담기관에 준용한다.

제3절 전자금융협회

제38조의25(전자금융협회의 설립 등) ①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자금융업, 그 밖의 디지털금융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전자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회원에 대한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권고

3.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4. 전자금융업, 그 밖의 디지털 금융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5. 전자금융업자가 제정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의 표준화 등에 관한 업무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④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회의 재원조성, 운영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8조의26(전자금융협회에 대한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제39조(감독 및 검사) ①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와 그와 관련된 재무상태를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

준용규정)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1조의8까지, 제38조의16, 제38조의21, 제38조의22, 제39조의2 및 제40조의3은 전자금융협회에 준용한다.

제5장 감독 및 처분

제39조(감독 및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

 -----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지키는지 여부-----
 -----.

② 금융위원회는 -----

 -----.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업무
와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
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⑤ (생략)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
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
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
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
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
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
장은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에게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
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검사의 방법·
절차,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
시할 -----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한다. 이하 제39조의2에서 같다)
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신 설>

제39조의2(금융보안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금융보안책임자를 통하여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점수 또는 등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39조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점수 또는 등급이 미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금융보안의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점수·등급의 표시,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절차,

및 검사) ① 금융회사 및 전자
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
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
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이
조에서 “외부주문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
경하는 때(전자금융보조업자가
다른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외부
주문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
나 변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
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
정에 따른 외부주문등과 관련하
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
라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전자금융보
조업자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자

① -----

----- 수탁자(제21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자,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하
며, 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
와 관련 ----- 경우(수탁자등이
다른 수탁자등과 해당 -----
----- 경우를 -----

----- 정하여
고시하는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에 따른
수탁자등의 업무 수행-----

----- 정하여 고시하는
--- 수탁자등-----
-----.

④ ----- 수탁자등이 -

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략)

⑥ 정보기술부문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 수
탁자등에 -----
----- 이 경우 제39조제
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⑤ -----

----- 수탁자등-----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40조의2(주요수탁자 등에 대한
조사 등의 특례) ① 금융위원회
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에 따른 수탁자등의 업무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탁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자등(이하 이 조에서 “주요수탁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4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

1. 관련 계약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2. 관련 계약에 따른 업무 및 그와 관련한 재산상황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조사. 이 경우 제3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40조제5항 각 호의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주요수탁자등에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신 설>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주요수탁자등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규 계약의 체결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의3(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이용자 예탁금 및 가맹점에 정산할 대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 및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금융보안에 관한 사항

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화폐발행자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

4. 전자금융업의 질서유지 및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① -----

-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 -----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

② -----

자금이체업을 하는 금융회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및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성과를

-----.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회계처리)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업무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업무
2.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업무
3. 직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업무
4. 후불결제업무
5. 제2조제2호의5가목의 업무
6. 제2조제2호의5나목의 업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전자금융업자는 고유재산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예탁금, 가맹점에 정산할 대금 및 그 밖의 부채와 현금흐름 등을 적절히

분석할 수 있도록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관리하고, 전자금융업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 그 위험에 대응---- 경영건전성을 확보----

② 전자금융업자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

----- 다음 -----

-----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의 특성, 후불결제업무를 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경영지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상태--
--
2. 전자금융업자의 지급능력--
--

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신 설>

-----.

제42조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등)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41조의2에 따른 회계처리 및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자금융업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전자금융업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전자금융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43조(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2. ~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조치) ① ----- 전자금융업자(겸영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8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 5. (현행과 같음)

6.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7.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0.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전자금융업을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35조,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긴 때

4. 제30조제4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조치를 할 -----.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③ · ④ (생략)

<신설>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다목·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마목·바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마목·바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2항

<신 설>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의2(외국 전자금융업자의 지점등의 허가·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전자금융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산

2. 파산

3.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멸

4.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폐지 또는 허가·등록의 취소

5. 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하는 전자금융업에 상당하는

<신 설>

영업의 중지 또는 정지

6. 외국 법령을 위반한 경우(국내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이로 인해 영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외국 전자금융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 전자금융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1항에 따라 그 업무에 관련된 허가 및 등록이 모두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산하여야 한다.

제43조의3(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임원이 제43조 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
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직원이 제43조
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
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
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조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다목·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마목·바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마목·바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다목·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마목·바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마목, 같은 조 제7호라목·마목·바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

제4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회사에게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44조(청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려는 -----
-----.

1.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 설>

<신 설>

<신 설>

는 등록의 취소

3.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4. 제43조의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제44조의2(처분 등의 기록 및 공

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의 규정
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
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3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1항
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는 제43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
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임직원을 조치한 경
우와 제39조의3에 따라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
다.

④ 제1항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

<신 설>

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⑤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조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이의신청) ① 제43조제2항 및 제43조의3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p>제45조(합병·해산·폐업 등의 인가)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1.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합병</p> <p><신 설></p> <p>2. 해산 또는 전자금융업무의 폐지</p> <p>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와 양수</p> <p><신 설></p>	<p><u>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제45조(전자금융업자의 합병·영업양도 등의 신고) ① 제28조제1항----- 받거나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겸영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p> <p>1.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p> <p>1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p> <p>2. ----- 전자금융업-----</p> <p>3. 전자금융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p> <p>4. 다른 회사 또는 법인에 대한</p>
---	--

<신 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
--.

1.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신 설>

<신 설>

제45조의2(예비인가)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을 폐지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로 본다. 이 경우 제3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5조의2(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의 합병·영업양도 등에 대한 특례) ①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업자(겸영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인가에 관하여는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6조(과징금) ① (생략)

<신설>

2.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 또는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자금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6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나 권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광고·권유를 지원하는 행위
2. 제3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제36조의3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오인하도록 한 행위
4. 제36조의3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행위
5. 제3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에 따

③ -----
----- 별표 1
----- 제1항 또는

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 (생략)

<신설>

제2항-----

----- 업무
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⑤ -----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규정-----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6조의2(주요수탁자등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40
조의2제1항에 따른 주요수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등의
100분의 50(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
용한다.

1.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를 제외한다)가 제36조의3제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주요수탁자등이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
자금융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한 경우(제36조의10제
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제36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되는 업무를 한
경우

나. 제36조의10제2항에 따라
체결하여야 할 위탁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다. 제36조의10제3항에 따라
위탁제한이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고
그 업무를 한 경우

3. 주요수탁자등이 제36조의10
제5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같은 조 제9항

	<u>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주요수탁자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u>제46조의2 (생략)</u>	<u>제46조의3 (현행 제46조의2와 같음)</u>
제4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u>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u>	제48조(권한의 위탁) ----- ----- ----- <u>금융감독원장, 전자지급거래청 산기관의 장, 보안지원전담기관의 장, 전자금융협회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 --.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① ----- ----- ----- -----.
1. <u>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 파괴· 은닉 또는 유출한 자</u>	<u><삭제></u>
<u><신설></u>	<u>1의2. 제22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 그 밖의</u>

	<p><u>정보자산에 접근하거나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여 전자금융사고·침해사고의 발생,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오류 또는 장애 등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을 발생시킨 자</u></p>
<p>2. <u>제21조의4제2호</u>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u>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 폭탄</u>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p>	<p>2. <u>제22조의3제2호</u>----- ----- <u>악성코드</u> ----- ----- --</p>
<p>3. <u>제21조의4제3호</u>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u>전자금융기반시설</u>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p>	<p>3. <u>제22조의3제3호</u>----- ----- -- <u>전자금융기반시설, 그 밖의 정보자산</u>-----</p>
<p>4. <u>제26조</u>를 위반하여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u>자</u>를 포함한다)</p>	<p>1. <u>제22조의2</u>----- ----- ----- ----- ----- ----- 자, 제38조의16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p>

	<p><u>관, 제38조의24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보안지원전담기관 및 제38조의26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전자금융협회를</u> --</p> <p>----</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u>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u></p>	<p>② -----</p> <p>-----</p> <p>-----</p> <p>---</p> <p>1. <u>접근매체 또는 전자지급수단 (제2조제11호나목, 라목 및 바목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은 제외하며, 이 항에서 “접근매체 등”이라 한다)을 위조·변조 또는 위작·변작</u>-----</p> <p>--</p>
<p>2. <u>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u></p>	<p>2. <u>위조·변조 또는 위작·변조된 접근매체등을</u> -----</p> <p>-----</p>
<p>3. <u>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u></p>	<p>3. ----- <u>접근매체등을</u> -----</p> <p>----- <u>사용(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u>---</p>
<p>4. <u>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u></p>	<p>4. -----</p> <p>-----</p>

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
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
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
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
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 판매 · 수출 또는 수입하거
나 사용한 자

③ 전자화폐는 「형법」 제214
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 4. (생략)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
공한 자 또는 보관 · 전달 · 유
통한 자

<신설>

----- 접근매체
등을 획득하거나----- 접근
매체등을 이용하여 -----

5. -----

----- 접근매체등을 -----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제2조제1
4호나목 후단에 따라 발행된 선
불전자지급수단은 제외한다)은
-----.

④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6조의5를 -----

6.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한 자

<신 설>

<신 설>

<신 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삭제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7.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8.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지급거래청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청산업에 관한 업무를 한 자

9.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업허가를 받은 자

⑤ -----

5. 제3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7. -----

<p>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u>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u>를 한 자</p>	<p>----- -- <u>전자결제</u>----- -----</p>
<p>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u>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u>를 대행한 자</p>	<p>8. ----- ----- <u>전자결제</u>----- -----</p>
<p>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u>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u>를 한 자 <u><신 설></u></p>	<p>9. ----- ----- <u>전자결제</u>-----</p>
<p><u><신 설></u></p>	<p>9의2.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9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권유·광고한 자. 다만,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p>

10.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신설>

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4. 5. (생략)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후불결제업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그 후불결제업
무로 구매하도록 한 재
화·용역을 할인하여 매입
하는 행위

10. (현행과 같음)

⑥ -----

1. 제3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금
융업에 관한 광고나 권유를
한 자

2. 제36조의10제1항 단서를 위
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

3. -----
-- 전자결제-----

4. 5. (현행과 같음)

6. -----
신고를 하지----- 같은 항

는 행위를 한 자

⑦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와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⑧ (생략)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호
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
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설>

<신설>

<신설>

⑦ 제1항제1호의2-----

⑧ (현행과 같음)

제51조(과태료) ① -----

-----(제3호

및 제3호의2-----

-----.

1. 제21조제1항-----

----- 아니-----

1의2. 제21조제2항제1호를 위반

하여 인력, 조직 및 예산에 관

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

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1조제2항제2호를 위반

하여 건물, 설비 등 시설에 관

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

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21조제2항제3호를 위반

<신 설>

하여 전자금융업무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21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분야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6. 제2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업무의 지속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7. 제21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재난 등에 대비한 비상대책, 비상대응훈련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8. 제21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위험 정도를 고려한 절차 및 통제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9. 제21조제2항제9호를 위반하여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p><u>주요수탁자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보안을 고려한 업무 위탁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u></p>
<p><u><신 설></u></p>	<p><u>1의10. 제21조제2항제10호를 위반하여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와 정보자산의 관리·운영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u></p>
<p><u><신 설></u></p>	<p><u>1의1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u></p>
<p><u><신 설></u></p>	<p><u>1의1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탁금을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관리기관에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u></p>
<p><u><신 설></u></p>	<p><u>1의13.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한 이용자에탁금이나 이에 관한 청구권을</u></p>

2.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
의 명칭을 사용한 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2. ----- 전자자금
이체-----

2의2. 제36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설하
여 준 계정을 이용자로 하여
금 계좌로 오인하게 한 자

2의3. 제36조의3제2항제2호나목
을 위반하여 이용자예탁금을
재원으로 대부, 그 밖의 신용
공여를 한 자

2의4. 제36조의3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양도 및 환급 기능을
결합하여 전자자금이체와 동
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
록 하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업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2의5. 제36조의3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지급지시
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의 자금을 보유한 자

2의6. 제36조의7제1항을 위반하
여 전자자금이체를 처리한 자

2의7. 제36조의7제4항을 위반하
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지

<p><u><신 설></u></p>	<p><u>급지시전달업자를 차별하거나 그 지급지시의 처리를 거절한 자</u></p>
<p><u><신 설></u></p>	<p>2의8. 제36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자</p>
<p><u><신 설></u></p>	<p>2의9. 제36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이용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전자금융업무의 제공을 거절한 자</p>
<p><u><신 설></u></p>	<p>2의10. 제36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게 제38조의9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등을 하도록 하지 아니한 행위</p>
<p><u><신 설></u></p>	<p>2의11. 제36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p>
<p><u><신 설></u></p>	<p>2의12. 제38조의7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p>
<p>3. (생 략)</p>	<p>3. (현행과 같음)</p>

<신 설>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3의2.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42조의2제1항-----

5.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자

② -----

1.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시용매체로서 인증서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인증서로 선정한 자

1의2.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않은 자

1의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의 발급·등록 및 사용·관리 등의 절차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 및 비

	<p><u>대면거래의 유형별 위험의 정도를 반영하여 비대면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u></p>
<p>1. (생략)</p>	<p>1의4. (현행 제1호와 같음)</p>
<p>2. <u>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u></p>	<p>2. <u>제21조의3제1항</u> ----- ----- 금융보안책임자를 지정----- 금융보안책임자를 사내이사 등-----</p>
<p>3. <u>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u></p>	<p>3. <u>제21조의3제3항</u>----- ----- ----- 금융보안책임자----- -----</p>
<p><u><신 설></u></p>	<p>3의2. <u>제21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보안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u></p>
<p><u><신 설></u></p>	<p>3의3. <u>제2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금융보안협의체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u></p>
<p>4. <u>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u></p>	<p>4. <u>제21조의5제1항</u>----- -----</p>

<p>분석·평가하지 아니한 자</p> <p>5.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지 아니한 자</p> <p><신 설></p> <p><신 설></p> <p>6.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7.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 자에게 재위탁을 한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p>	<p>-----</p> <p>5. 제21조의5제2항-----</p> <p>-----</p> <p>-----</p> <p>5의2. 제21조의8제1항을 위반하 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p> <p>5의3. 제21조의9제1항을 위반하 여 안내 또는 공지를 하지 아 니한 자</p> <p>6. (현행과 같음)</p> <p>6의2. 제22조의4제2항을 위반하 여 재난관리 행동매뉴얼을 수 립하지 않거나 이를 지키지 아니한 자</p> <p>6의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 의 행위를 한 자</p> <p>7. 제36조의10제9항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5 항-----</p> <p>-----</p> <p>③ -----</p> <p>-----</p> <p>-----</p>
--	--

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신설>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신설>

6.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아니한 자

-----.

1. · 2. (현행과 같음)

3. ----- 선불전자지급수단-----

3의2. 제21조제2항제8호를 위반하여 금융보안 관련 교육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

5. 제21조의5제1항-----

5의2. 제21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보안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의6제1항-----

<p><u><신 설></u></p> <p>7. · 8. (생 략)</p> <p>9.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u>보고</u>하지 아니한 자</p> <p>10. (생 략)</p> <p><u><신 설></u></p> <p>1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p> <p>④ (생 략)</p>	<p>6의2.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중대사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p> <p>7. · 8. (현행과 같음)</p> <p>9. ----- ----- <u>보고 또는 신고</u>----- --</p> <p>10. (현행과 같음)</p> <p>11. 제36조의3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제37조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자</p> <p>12.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 ----- -----</p> <p>④ (현행과 같음)</p>
---	---